2012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1호
ISSN 2093-2111

개발공헌지수(CDI)와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를 통해 본 우리 원조 개선방안

KOICA Development Policy Focus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

KOICA WORLD'S FRIEND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825 Daewangpangyo-ro, Siheu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833, Korea
T. 031-740-0114 F.82-31-740-0655
http://www.koica.go.kr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 11 호

개발공헌지수(CDI)와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를 통해 본 우리 원조 개선방안

KOICA

저자

박 수 영

KOICA ODA연구실 과장 (carpediem@koica.go.kr)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Poverty and Development Division 전문관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정책학 박사과정

▸ 주요 저서

- "개발협력컨설팅ODA사업과 공적개발원조개선방안". 개발협력정책과이슈 제5호. 2012.
- "DAC가입에 대비한 KOICA의 과제: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 이행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제4호. pp.52-83. KOICA. 2009.
- "Analysis of Saemaul Undong: A Korean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1970s", Asia-Pacific Development Journal, Vol. 16. No. 2. pp.113-140. UNESCAP. 2009.
- 프로젝트 관리와 평가: 프로젝트 기획,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론. KOICA. 2009.
-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체제 평가연구. KOICA. 2009.

고 요 한

KOICA ODA연구실 전문관 (yohanko@koica.go.kr)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정치경제개발학석사
미국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MCC) 컨설턴트

▸ 주요 저서

- Invest in Morocco: Your investment opportunity Moroccan Olive Oil. Millennium Challenge Account-Morocco. 2010.
- Invest in Morocco: Date Post-Harvest Handling and Packaging Activities. Millennium Challenge Account-Morocco. 2010.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Executive Summary ····· 01

1. 개요 ····· 02

2. 개발공헌지수(CDI) ····· 04
   2.1. CDI 개요 ····· 04
   2.2. CDI 원조(Aid)지표 산정 방법 ····· 04
   2.3. CDI 원조(Aid)지표의 의의와 한계 ····· 09
   2.4. CDI를 통해본 한국의 ODA ····· 14

3.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 ····· 17
   3.1. QuODA 개요 ····· 17
   3.2. 31개 지표 설명 ····· 18
   3.3. QuODA의 의의와 한계 ····· 30
   3.4. QuODA를 통해본 한국의 ODA ····· 35

4. CDI, QuODA와 우리 원조의 개선사항 ····· 40

5. QuODA 기관별 평가와 KOICA의 고려사항 ····· 44
   5.1. QuODA 기관별 평가 결과 ····· 44
   5.2. QuODA 평가결과를 고려한 KOICA의 개선사항 ····· 46

6. 기관별 성과평가와 국제적 평가의 활용 ····· 49

7. 결론 ····· 51

Appendix 1.
원조형태(Aid Modality)와 새로운 분류법들(Aid Instruments) ··· 52

Appendix 2.
국가별 CRS 데이터 수와 size weight 그래프 (2003-2011년) ···· 55

Executive Summary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와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공여국의 원조 정책 및 원조 수행 방식의 효과성을 수치화하여 평가함으로써 원조의 질을 높이며 수원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신흥공여국으로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별 원조체계와 방법 개선 요구의 근거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두 국제적 지표들은 점수산출기준 및 방법에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공헌지수(CDI)는 구속성 패널티 계산에 사용된 비율 적용 문제, 수원국 선택계수 사용의 적절성 여부, 민간기부 금액의 신뢰성 부족, 질보다는 양에 의해 결정되는 원조 지표 점수 등 지수산정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 또한 가중치 산정의 복잡성과 다대성, 원조수행방식과 원조의 질 향상간의 논리적 연계성의 취약점, 통계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등의 지표산정의 문제를 갖는다. 한편, 두 지표는 신흥공여국의 특수성을 간과하여 유럽 전통 공여국의 원조방식에 기초하여 원조효과성 측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전비용소요문제에 대한 고려가 적다. 또한, 원조분업화시스템이 신흥공여국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국별 집중도 강화가 신흥공여국내 원조수행업체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으며, 문화나 언어 등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내용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공여국 원조의 질을 좀 더 건실하게 평가하기 위해 지표를 발표하는 해당 기관은 지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하겠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협력대상국 선택시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고, 비구속화 원조를 확대하며, 원조분절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신흥공여국으로서의 특수성을 적극 표명하여 선진 공여국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야겠다. KOICA는 원조실행기관으로서 증가하는 예산과 대내외적 효과성 제고 요구에 맞춰 사업건수를 축소하고 단위사업 예산을 증대하며, 사업수행체제를 개선하고 국별, 분야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며 연구와 정책 개발에 힘써 우리나라의 원조의 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개요

1990년대 이후 개발원조 효과성 강화를 강조하는 일련의 논의가 대두되었다. 반세기 동안의 지원에 비해 더디게보이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상황에 의한 원조피로와 냉전이후 원조의 외교전략적 필요성 감소에 의한 원조금액 감소는 상대적으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공여국들의 원조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이하 CDI)와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QuODA)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공여국별 원조 평가이다.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공여국들은 자체적인 평가와 심사를 통해 자국 원조를 평가해왔으나, 주로 질적평가인 경우가 많았으며, 국별, 기관별 비교는 어려웠다. CDI와 QuODA는 평가결과를 수치화하고 국별, 기관별 성취도를 비교가능하도록 나타내었다. 이로서 공여국 정부들과 공여기관들은 시민사회나 의회 등으로부터 자국의 원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평가를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원조수행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즉, CDI와 QuODA는 공여국과 원조기관들에게 기존의 국가별, 원조기관별 성과평가나 감사, 원조의 질 심사와는 다른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CDI와 QuODA가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과 지표를 성립하고, 평가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분석이 거의 없다.

[표 1] CDI와 QuODA 비교

	CDI	QuODA
시작	2003년 (2001년 데이터 활용) ※ 한국은 2008년부터 평가대상	2010년 (2008년 데이터 활용)
수행 기관	국제개발센터(CGD)	국제개발센터(CGD)와 브루킹스연구소
목적	국별 개발(Development)에 대한 공헌도 측정	국별 공적개발원조(ODA)의 질 측정
범위	7대 분야 원조, 무역, 투자, 이주, 환경, 안보, 기술	4개 측면(효율성증대, 제도개선, 수원국부담 경감, 투명성과 학습) 31개 지수
산정	7대 분야별 지수산정 후 1개로 통합하여 순위 산정	4개 측면별로 지수산정 후 각각 순위산정. 통합 지수 및 순위 없음.
준위	국가	국가 및 기관
특징	– 원조보다 광범위한 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 평가 – 원조부분은 결과적으로 원조의 양평가임. (Quality-Adjusted Aid Quantity) – 지표산정방식을 수정하는 등의 불안정성이 있음	– ODA질 평가로 보다 제한된 목적과 범위를 가짐. – 국별 뿐 아니라 기관별 평가실시 – 양적인 면뿐 아니라 정책유무등 질적인 면 평가 – 짧은 역사로 지표를 변경하는 등의 불안정성이 있음

출처 : 저자 작성

CDI와 QuODA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저조한 원조 성적표에 대한 비판은 많으나, CDI와 QuODA의 평가결과를 어디까지 따라야 할지, 과연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과 집행 현실을 무시하고 따라야 할 만큼의 절대적인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적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고,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은 없는 사회과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연구는 첫째로 CDI와 QuODA의 성립배경, 지표의 정의들, 산정과정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서술한 뒤에 둘째로 CDI와 QuODA의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KOICA와 우리정부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리하여, 우리가 취사선택할 교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2. 개발공헌지수(CDI)

2.1. CDI 개요

CDI는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이하 CGD)에서 개발과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7개의 분야(원조, 무역, 투자, 이주, 환경, 안보, 기술)에서 선진국의 대내외 관련 정책이 가난한 국가들의 발전을 얼마나 촉진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수치화한 것이다. 분야별로 선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조는 개발 재원을 제공하고, 무역은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으로 판매 영역을 확대하면서 자국 내 고용을 창출하게 도와주며, 투자는 개발도상국에 산업 성장을 위한 자본을 공급하여준다. 이주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의 노동시장에 고용되어 자신들의 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 해준다. 환경은 선진국의 환경파괴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시켜주고, 안보는 개발의 선행 조건, 기술은 개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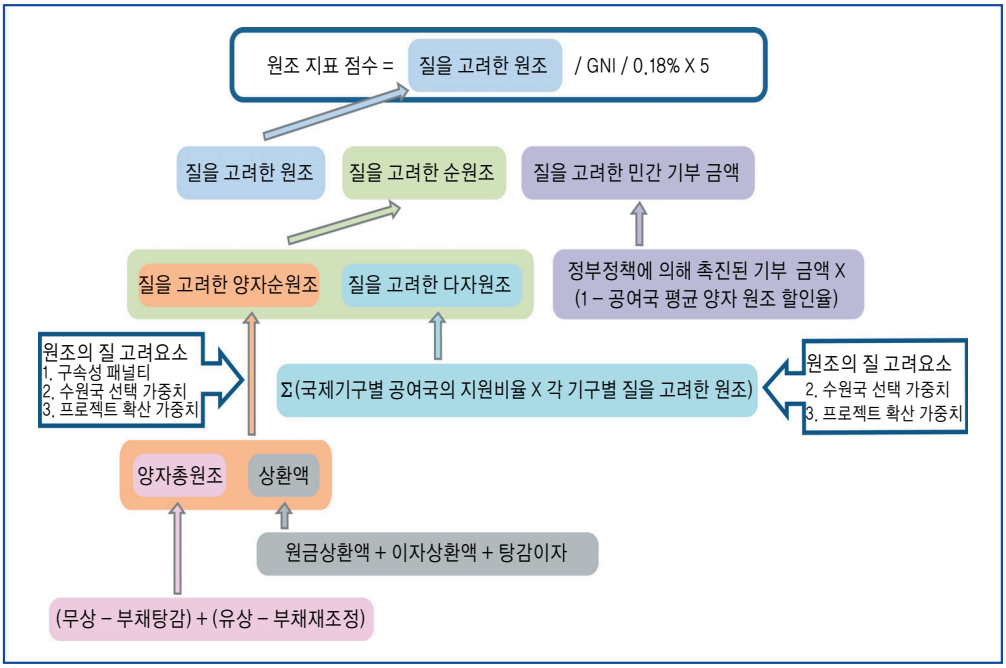
CDI는 지표 산정을 위해 세계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 유엔 등 공신력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국가별로 따로 수집하여 지표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OECD/DAC(이하 DAC) 등의 2001년 데이터를 토대로 산정한 2003년도 지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여 2009년도 데이터를 사용한 2011년 지수까지 총 9번 발표가 되었다. 7개 분야 중 기술 분야는 2004년도에 추가되었으며 각 국가별 전체 점수는 이 7개 분야의 점수의 평균으로 구성된다. CGD는 매년 지수 산정 방식을 약간씩 수정해 왔는데 연도별 변화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2008년의 분야별 평균 점수를 5점[1]으로 설정하여 비교의 기준치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회에 걸쳐 CDI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DI를 구성하는 7개 분야별 지표 중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개발도상국 개발에 대한 공헌도를 측정하는 원조(Aid) 지표 점수의 계산 방법, 의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CDI 원조(Aid)지표 산정 방법

CDI의 원조 지표 점수는 아래와 같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산정된다. 이제 총 8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계산방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CDI 보고서에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5점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였으나 2008년 데이터 확인 결과 환경 분야와 7대 분야 전체 평균은 이와 달리 각각 5.7, 5.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CDI 원조 지표 점수 계산 단계



출처 : 저자 작성

1 양자 총원조[2] 산정 (Gross Aid Transfers)

CDI에서는 원조지표 산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표설정의 기준이 될 원조금액을 계산한다. 원조금액은 양자와 다자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먼저 양자총원조금액을 산정한다. 양자 총원조(Gross Aid)는 양자 무·유상 원조의 총액에서 부채탕감과 부채재조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금액을 제외하는 이유는 실제로 부채탕감과 부채재조정 금액이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흘러간 것(Transfer)이 아닌 회계기록에서만 표시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양자 총원조 = (무상 – 부채탕감) + (유상 – 부채재조정)

2 부채상환액 차감 (Subtracting debt service)

CDI 원조지표의 원조금액은 실제로 수원국에 지출된 금액만을 엄격히 적용하므로 위에서 구한 양자총원조금액에서 양자순원조금액을 구해야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앞

2) CDI 보고서에서는 Gross Aid를 양자 금액만인지 양다자 합산 금액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양자 금액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Gross Aid를 양자 총원조로 번역하였다.

단계에서 구한 양자 총원조에서 이미 수원국이 공여국에게 지급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액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양자 순원조 (Net Aid)를 계산한다. 이때 부채탕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 탕감은 실제로 상환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상환액에서 제외한다.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자금 흐름이 나타나지 않은 회계기록상의 금액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DAC에서 순 ODA를 계산할 때 총 ODA에서 원금 상환액만을 제외하는 것에 반해 CDI에서 이자 상환액을 함께 제외한다. 즉, CDI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순원조액을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자 순원조 = 양자 총원조 – 상환액 (reflow)
= 양자 총원조 – [원금 상환액 + (이자 상환액 – 탕감이자)]

3 구속성 원조 패널티 부과 (Discounting tied aid)

이제 1, 2단계에서 구해진 양자 총원조와 순원조금액에 원조의 질을 고려한 요소들을 추가하여 "질을 고려한 원조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CDI에서는 3가지의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첫 번째는 구속성원조에 대한 패널티, 두 번째는 수원국 선택(Selectivity) 가중치, 세 번째는 프로젝트 확산 가중치이다. 이제 질을 고려한 양자 순원조 계산을 위해 먼저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 금액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 앞서 말한 3가지 질적요소 중 첫 번째인 구속성원조에 대한 패널티를 양자 총원조에 부과한다. 구속성원조가 원조의 가치를 떨어드린다는 관련 연구에 근거하여 구속성 원조에는 해당 금액의 20%, 부분구속성 원조에는 10%의 패널티를 부과하여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를 계산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고서에서 지출액 데이터는 구속성, 부분구속성, 비구속성 금액 구분이 불가하여 약정액 데이터에서 나오는 구속성, 부분 구속성, 비구속성 비율을 지출액에 곱하여 구속성, 부분구속성, 비구속성 지출액 금액을 계산하였다. 또한 국가미배분으로 인하여 구속성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는 비구속으로 간주하였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아래 Box에서 보여주듯 구속성원조패널티를 반영할 때 양자총원조액을 긴급구호원조와 긴급구호외원조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이다. 이는 뒤에 4단계에서 수원국선택 가중치 부여 시 긴급구호원조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먼저 구분한 것이다.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 1 (Quality adjusted gross aid 1)
= 구속성 패널티를 반영한 긴급구호외 양자 총원조 + 구속성 패널티를 반영한 긴급구호
= [긴급구호외 양자 총원조 – (긴급구호외 양자 총원조의 구속성 금액 x 0.2) –
(긴급구호외 양자 총원조의 부분 구속성 금액 x 0.1)] + [긴급구호 – (긴급구호구속성
금액 x 0.2) – (긴급구호 부분 구속성 금액 x 0.1)]

4 수원국 선택 질 반영 (Adjusting for selectivity)

다음으로 원조의 질을 고려하는 두 번째 요소인 수원국 선정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를 계산을 심화한다. 이를 위해 원조금액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수원국별 선택 (selectivity) 계수를 산정하였는데, 이 계수는 1인당 국민소득 데이터와 Daniel Kaufman 과 Aart Kraay의 KK지수[3]를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더 가난하면서 우수한 거버넌스를 갖춘 국가에 지원하는 것이 원조 효과성을 높인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선택 계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KK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좋은 수치가 나오도록 설계 되었다. 각 수원국 별로 계산된 선택 계수와 공여국의 원조 배분 현황을 토대로 공여국 평균 선택 계수를 도출한 후 이를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 계산에 사용하였다. 이때 긴급구호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지원은 계산 과정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구호는 원조형태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추진되는 활동이고 따라서 거번넌스 수준과 상관없이 효과성을 갖게되며, 둘째 거버넌스가 약한 나라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데 패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KK지수 정보가 없는 국가 미배분의 원조의 경우에는 공여국의 평균 선택 계수를 사용하여 가중치 금액을 계산하였다.

>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 2 (Quality adjusted gross aid 2)
> = (구속성 패널티를 반영한 긴급구호외 양자총원조 x 공여국 평균 선택 계수) + 구속성 패널티를 반영한 긴급구호

5 프로젝트 확산 패널티 부과 (Penalizing project proliferation)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를 구하는 마지막 단계로 프로젝트 확산 정도를 계수화하여 양자 총원조에 가중치를 부과한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수의 작은 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 소수의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적은 행정비용을 발생시켜 원조 효과성을 높인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평균 프로젝트 규모가 큰 공여국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이즈 가중치 (size weight) 계수가 높게, 프로젝트 규모가 작은 공여국에는 사이즈 가중치 계수가 낮게 나오도록 계수 도출 공식을 설계하였다. 공여국별 사이즈 가중치 계수를 도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확산 가중치를 고려한 원조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4]을 구성하여 수원국별 해당

3) KK지수는 국가거버넌스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WGI)를 말한다. WGI는 발언권과 책무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법치(Rule of Law),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라는 6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CDI 보고서에는 WGI를 KK지수로 명기하였고, Voice and Accountability를 Democracy로,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를 Political Instability로, Regulatory Quality를 Bureaucratic Regulation로, Control of Corruption를 Corruption로 표시하고 있다.

원조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여국별 사이즈 가중치 계수를 도출한 것이다. 그리고 특정 수원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여국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수원국의 평균 사이즈 가중치 (Recipient average size weight) 계수도 계산하였다.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 최종 =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 2 x 공여국 사이즈 가중치 계수

이제 최종적으로 질을 고려한 양자순원조를 구하기 위해 2단계에서 구해진 상환액도 원조의 질 고려 요소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질을 고려한 양자 순원조는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에서 질을 고려한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질을 고려한 양자 순원조 = 질을 고려한 양자 총원조 최종 – (상환액 x 공여국 평균 선택 계수 x 수원국 평균 사이즈 가중치 계수)

6 질을 고려한 다자원조 합산 (Allocating multilateral quality-adjusted aid to bilaterals)

이제 다자원조를 계산한다. 다자원조 또한 원조금액에 질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국제기구별로 DAC에 보고한 원조 금액에 국제기구별 평균 선택 계수와 국제기구별 사이즈 가중치 계수를 적용하여 다자원조 기관별 질을 고려한 원조 금액을 계산한다.[5] 이 금액에 해당 국제기구에 지원을 실시한 공여국별 지원비율을 곱하여 질을 고려한 다자원조금액을 산출한다.

질을 고려한 다자원조 = Σ[(각 국제기구에서 보고한 원조 금액 x 국제기구별 평균 선택 계수 x 국제기구별 사이즈 가중치 계수) x 공여국의 해당 기구 지원 비율]

이제 마지막으로 질을 고려한 순원조금액을 계산한다. 앞서 계산한 질을 고려한 양자 순원조에 질을 고려한 다자원조를 합산하여 질을 고려한 순원조를 산출한다.

질을 고려한 순원조 = 질을 고려한 양자 순원조 + 질을 고려한 다자 원조

4) 이 공식은 특정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로그 프로젝트 규모(log project size) 확률 함수와 가중 확률 함수(size weight function)를 곱한 후 적분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때 가중 확률 함수에는 KK지수가 계수로 사용되었다.

5) 국제기구별 평균 선택 계수와 국제기구별 사이즈 가중치 계수는 질을 고려한 양자총원조의 공여국별 평균 선택 계수와 사이즈 가중치 계수를 구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7 민간 기부 금액 합산 (Rewarding tax policies that support private giving)

마지막으로 민간 기부 금액을 합산하는데 그 이유는 공적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개발협력 재원으로 투입이 되고 이 민간자금의 흐름이 정부 재정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중 세액 공제 제도와 GDP대비 세금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이 부재했을 때 발생할 기부금액과 실제 기부액을 비교하여 정책에 의해서 촉진된 기부 금액을 예측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민간 기부 금액은 각 공여국이 DAC table 1의 'NGO에 의한 원조' 항목에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한편, 민간기부 금액 또한 수원국 선정, 프로젝트 확산과 같은 원조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을 고려한 민간 기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공여국의 평균 양자 원조 할인율(Average bilateral quality discount)[6]을 앞서 예측한 정부정책에 의해 촉진된 기부금액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질을 고려한 민간 기부 금액을 계산한다.

> 질을 고려한 민간기부 금액
> = 정부 정책에 의해 촉진된 기부 금액 x (1 – 공여국 평균 양자 원조 할인율)

8 GNI 대비 질을 고려한 순원조 및 민간 기부 금액

최종적으로 6, 7단계에서 도출한 질을 고려한 순원조 금액과 질을 고려한 민간 기부 금액을 합산하여 GNI로 나눈 후, 그 값을 다시 2008년 공여국들의 평균 GNI 대비 질을 고려한 순원조 및 민간 기부 금액(=0.18%)으로 나누고 평균 5점(Standard Mean)을 곱하여 최종 원조 지표 점수를 계산한다.

> 원조 지표 점수 = (질을 고려한 순원조 및 민간 기부 금액 / GNI) / 0.18% x 5

2.3. CDI 원조(Aid)지표의 의의 및 한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원조이외의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자금흐름 중 민간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개발원조가 차지하는 부분은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CDI는 원조를 포함하여 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들에 대한 주요 공여국들의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공

6) 평균 양자 원조 할인율=질을 고려한 양자 순원조/양자 순원조

여국의 정책일관성과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각 분야별로 공여국 정책의 수원국 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비교가능토록하며 또한 공여국 내의 분야별 공헌도 비교도 가능토록 하여 상대적으로 미진한 분야의 정책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7대 분야의 개발에 대한 상관관계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7대 분야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두어 최종지수를 계산하였다는 것은 지표의 신뢰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 분야별 상관관계의 차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가중치를 부과하기 보다는 산술적인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라 볼 수도 있다.

CDI 원조(Aid)지표 점수는 공여국의 원조 정책이 수원국의 발전을 얼마나 촉진하였는지 점수화하여 국가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여국이 개발원조정책을 결정할 때 보다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CDI의 원조 지표 산출과정과 논리적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한계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

■ 구속성 패널티 계산에 사용된 구속성 비율의 적용 범위 문제

CDI에서 원조의 질을 평가한 첫 번째 항목이 구속성 패널티의 부과이다. 그런데 이 비용을 산정할 때 사용한 구속성 비율의 적용 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구속성 원조 패널티 계산은 구속성원조 지출액에 구속성 패널티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출액 기준의 구속성 원조액을 알 수 없으므로, CDI에서는 지출액과 약정액의 구속성 비율이 같다고 가정하고, 약정액의 구속성비율을 지출액에 곱하여 구속성 원조금액을 계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CDI 원조 분야 점수를 산정할 때 출발점이 지출액인데 반해 구속성 원조금액을 지출액 기준이 아닌 약정액 기준의 구속성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져 보인다. 게다가 약정액의 구속성 여부가 보고되는 사업은 신규 사업 또는 계속 사업 중 약정액이 증액된 사업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즉 약정액의 증액이 없어 구속성 여부가 보고되지 않는, 계속 사업의 지출액에도 당해 연도 약정액의 구속성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아래 표를 보면 2011년 CDI 원조 점수 계산에 사용된 2009년 CRS 데이터 중 공여국별 양자 총 지출액 중 계속 사업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09년 공여국별 양자 총 지출액 중 계속 & 신규 사업 비율

(단위 : 백만달러)

국가	계속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율	신규사업 비율	양자 총지출
Australia	1,922	390	83%	17%	2,312
Austria	99	422	19%	81%	520
Belgium	330	1,334	20%	80%	1,663
Canada	1,379	1,802	43%	57%	3,182
Denmark	958	708	58%	42%	1,666
Finland	694	92	88%	12%	786
France	1,945	6,485	23%	77%	8,430
Germany	3,731	4,628	45%	55%	8,359
Greece	0	297	0%	100%	297
Ireland	0	697	0%	100%	697
Italy	554	497	53%	47%	1,051
Japan	6,392	6,593	49%	51%	12,985
Korea	365	250	59%	41%	615
Luxembourg	0	265	0%	100%	265
Netherlands	2,904	2,054	59%	41%	4,957
New Zealand	202	23	90%	10%	224
Norway	892	2,277	28%	72%	3,168
Portugal	92	221	29%	71%	312
Spain	1,115	3,625	24%	76%	4,740
Sweden	1,129	1,899	37%	63%	3,028
Switzerland	913	848	52%	48%	1,761
United Kingdom	3,466	4,244	45%	55%	7,710
United States	9,303	16,690	36%	64%	25,992

출처 : 저자 작성, OECD 2009년 CRS 데이터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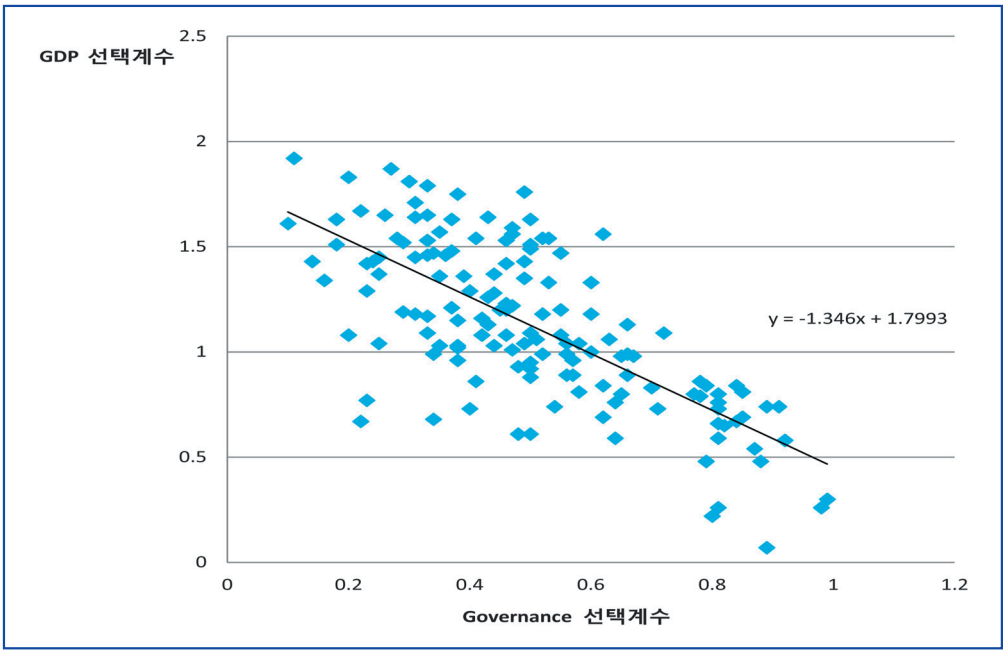
■ 선택 (Selectivity) 계수 사용의 적절성 문제

CDI의 두 번째 한계점은 원조의 질을 평가를 위해 고려하는 수원국 선정의 적절성 가중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 가난한 나라이면서 거버넌스 지수가 높은 나라에 지원을 해야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보고서는 애기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 계수 도출을 위해 사용한 수원국별 GDP 선택 계수[7]와 Governance 선택 계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시에 두 계수가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계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수원국으로 빈곤한 나라를 선택하려하면 결국

7) GDP 선택 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가난한 나라이고 Governance 선택 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거버넌스가 좋은 나라이다

거버넌스가 낮은 나라가 선택이 되고, 반대로 거버넌스가 높은 나라를 선택하려하면 덜 빈곤한 나라가 선택이 되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두 계수의 회귀분석결과에서 보듯이 Adjusted R square (조정된 결정계수)가 0.51로[8] 이 회귀모델의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0.72로 1에 가까워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원국 선정의 적절성를 평가하는데 CDI 보고서에서 도출한 선택 계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그림 2] GDP 선택 계수와 Governance 선택 계수의 회귀모델



출처 : 저자 작성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717925996
결정계수	0.515417736
조정된 결정계수	0.512075789
표준 오차	0.268565469
관측수	147

분산 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	11.1239798	11.1239798	154.226799	1.4153E-24
잔차	145	10.4584746	0.07212741		
계	146	21.5824544			

8) Governance 선택 계수의 분산이 GDP selectivity 계수의 분산의 51%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상위 95.0%
Y 절편	1.7993	0.0589	30.5401	0.0000	1.6828	1.9157	1.6828	1.9157
X 1	-1.3460	0.1084	-12.4188	0.0000	-1.5603	-1.1318	-1.5603	-1.1318

■ 민간 기부 금액의 신뢰성의 문제

세 번째로 민간 기부 금액 데이터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DAC table 1의 'NGO 에 의한 지원' 항목의 금액을 질을 고려한 민간 기부 금액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나, 이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공여국별로 상이하여 일괄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민간 단체의 해외 지원액 보고를 강제할 수 없어 공여국별로 보고되지 않고 누락되는 금액의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여국내에 있는 민간 단체들의 모든 해외 원조 규모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우리나라는 KOICA와 협업을 하는 NGO를 중심으로 이 금액을 조사하여 DAC에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Foundation center[9]와 같이 자국의 비영리단체, 재단 사회공헌기업들 전체의 모금, 배분, 기부 정보를 한곳에서 취합하여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DAC table 1에 보고되는 각 공여국들의 NGO에 의한 지원 금액은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질을 고려한 민간 기부 금액 산정에 사용된 공여국의 평균 양자 원조 할인율의 적정성 문제

CDI 보고서에서는 민간 기부 금액 또한 질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민간기부금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계수를 고안하지 않고, 공여국의 평균 양자 원조 할인율을 일괄적으로 민간 기부 금액에 적용하여 질을 고려한 민간 기부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민간 기부는 정부의 이해관계와 전략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는 ODA와는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 정부의 ODA는 외교적 이해관계나 국가전략에 의해서 수원국의 개발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분야에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을 평가하여 보다 수원국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여국의 ODA전략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민간 기부 금액의 질 측정을 위해 ODA의 질의 측정결과로 얻어진 공여국의 평균 양자 원조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9) Foundation Center는 미국 전체 비영리단체 정보, 재단, 사회공헌기업의 모금, 배분, 기부 정보를 모아 놓은 정보센터이다.

■ 질보다는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원조 지표 점수

CDI의 원조지표는 원조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원조지표를 계산하는 출발점은 양자 총원조로 질이 아닌 양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CDI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결국 원조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 원조액의 규모가 커야 한다. CDI의 원조 점수는 원조의 질을 재는 지수가 아니라 질을 고려한 양(Quality-Adjusted Quantity of Aid)을 재는 지수이므로 원조 금액이 타 공여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양적 증대 없이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여국은 원조의 절대적 양이 작으므로 CDI 원조지표의 획기적인 개선이 어렵다.

■ 참여적개발/굿거버넌스 마커의 배제

CDI에서는 수원국 선택 가중치를 계산할 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지원된 금액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되지 않도록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지원된 금액은 제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CDI는 CRS 코드 중 '공공행정과 시민사회(Government and Civil Society)' 분야에 해당하는 15XXX 코드를 모두 제외하였다. 그러나, CDI가 거버넌스 측정을 위해 사용한 KK지수에서도 거버넌스의 개념은 이보다 더 포괄적이다. OECD의 CRS에서도 참여적 개발, 민주화, 굿 거버넌스, 인권존중의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참여적개발/굿거버넌스 (Participatory Development & Good Governance)'라는 마커를 부여하는 지침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즉, 15XXX 코드가 부여된 사업 이외에도 참여적개발/굿거버넌스 마커 값이 입력된 사업이라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에 개선을 위해 지원된 금액을 수원국 선택 가중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참여적개발/굿거버넌스 마커 값이 부여된 사업들에 지원된 금액 또한 제외했어야 보고서에서 제시한 논리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2.4. CDI를 통해 본 한국의 ODA

2011년 발표된 한국의 원조 부분 점수는 1.0으로 평가 대상 22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2008년 처음 평가를 받은 이래 점진적으로 점수가 향상되고 있으나 타 공여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한국의 CDI 원조(Aid)지표 평가 변화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양자 총원조	질을 고려한 순원조	질을 고려한 순원조/ GNI	질을 고려한 순원조/ 순원조 (원조의 질)	질을 고려한 민간 기부액	질을 고려한 민간기부액/ GNI	질을 고려한 순원조 및 민간기부액/ GNI	점수
2008	401.39	167	0.02%	38%	18	0.002%	0.02%	0.6
2009	525.48	295	0.03%	44%	9	0.001%	0.03%	0.9
2010	578.66	324	0.03%	42%	22	0.002%	0.04%	1.0
2011	615.31	267	0.03%	34%	24	0.003%	0.03%	1.0

출처 : 저자 작성, (Roodman, 2011b) 표 재구성

CDI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원조 부분 점수가 낮은 건 실질적으로 절대 원조금액이 작기 때문이다. 원조의 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원조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원조 금액은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타 공여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아래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원조 재원, 특히 질을 고려한 원조 금액에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는 무상원조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 2011년 한국과 GNI가 비슷한 타 공여국의 질을 고려한 순원조 및 민간기부액/GNI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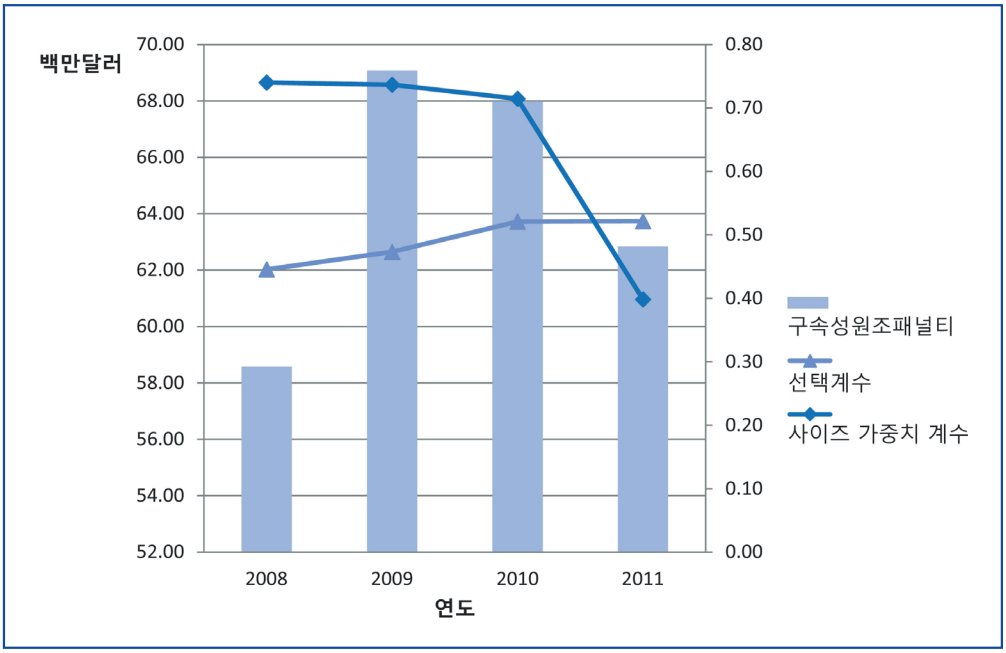
공여국	질을 고려한 순원조	질을 고려한 민간 기부액	GNI	질을 고려한 순원조 및 민간 기부액/GNI
Australia	1,241	125	940,529	0.15%
Netherlands	3,097	89	783,178	0.41%
South Korea	267	24	837,241	0.03%

출처 : 저자 작성, (Roodman, 2011b) 표 재구성

한편, [표 3]에서 201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던 질을 고려한 순원조가 2011년 줄어든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사이즈 가중치 계수의 축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속성 패널티는 CDI 평가 첫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선택 계수도 0.5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프로젝트 확산 정도에 가중치를 주는 사이즈 가중치 계수는 2010년까지 0.7 수준에 있다가 2011년 급격히 감소하여 0.4를 기록하였다. 사이즈 가중치 계수를 구하는 공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KK지수, 프로젝트 수, 평균 프로젝트 규모, 최적 프로젝트 규모 등이 있는데 어느 한 변수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관련된 변수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공여국별 연도별 CRS 데이터 건수[10]와 사이즈 가중치 계수의 관계를 살펴본 그래프에

서 두 변수의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Appendix 2 참조) 따라서, 프로젝트 확산 패널티 부과를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수를 줄이기는 노력과 함께 해당 패널티 계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더 상세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고 수원국 선택기준을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기준으로 맞춰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한국의 CDI 원조(Aid)지표 질적 고려 요소 항목별 수치 변화



출처 : 저자 작성, www.cdgev.org CDI 원데이터 재구성

10) CDI에서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는 CRS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CRS상의 데이터건수를 프로젝트건수로 가정하였다.

3.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

3.1. QuODA 개요

QuODA는 2010년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국제경제개발연구소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와 CGD가 개발한 공적개발원조의 질적 평가이다. 브루킹스연구소와 CGD는 매년 QuODA를 발표하기로 하여 2011년에 2차 평가를 완료하고 2012년 4월 평가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QuODA는 기존의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계승, 발전시켜 각 공여국별, 공여기관별 원조수행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2010년 최초로 발표된 QuODA는 4개 분야(Dimension) 30개 지표를 갖고 있었으나, 2011년 두 번째 평가에서는 31개 지표로 수정, 보완되었다.

QuODA 평가팀은 2010년도에 첫 번째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데이터는 2008년도에 보고된 데이터였다. 2011년도의 2차 평가는 2009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데이터가 수집된 연도에 따라 1차 평가를 2008년 평가로 2차 평가를 2009년 평가로 표기하였다. QuODA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다. 31개 지표별로 아래와 같이 측정값을 구한 뒤 Z-Score[11]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각 지표별 Z-Score의 평균값이 4개의 평가분야별로 나타나며, 이 값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Z-Score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대상국가나 공여기관이 해당 지표에서 평균이상의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0보다 작다는 것은 결과가 평균이하임을 의미한다.

[표 5] QuODA 4대 평가분야와 31개 세부지표

효율성 증대 (Maximizing efficiency)	제도 배양 (Fostering institutions)	행정부담 경감 (Reducing burden)	투명성과 학습 (Transparency and Learning)
빈곤국 지원 비중 Share of allocation to poor countries	수원국 우선 개발과제 지원비중 Share of aid to recipients' top development priorities	원조관계의 중요성 Significance of aid relationships	IATI 가입여부 Signatory of IATI
안정된 거버넌스 보유국가 지원 비중 Share of allocation to well-governed countries	PIU활용 최소화 Avoidance of project implementation units	공여국내 원조기관 분절화 Fragmentation across donor agencies	IATI 보고기준 활용 Implementation of IATI data reporting standards

11) 측정값 X와 평균값간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눈 수

공여국의 낮은 행정비용 Low administrative unit costs	수원국 예산에 기록된 원조 비중 Share of aid recorded in recipient budgets	프로젝트규모 중간값 Median project size	프로젝트명과 개요 기록 Recording of project title and descriptions
높은 CPA원조 비중 High country programmable aid share	우수실행전략을 보유한 수원국 지원 비중 share of aid to partners with good operational strategies	다자기관 지원비율 Contribution to multilaterals	프로젝트설명자료 Detail of project descriptions
높은 국가 집중도 Focus/specialization by recipient country	수원국 시스템 활용 use of recipient country systems	수원국 방문 조율 Coordinated missions	원조분배채널 보고 Reporting of aid delivery channel
높은 분야 집중도 Focus/specialization by sector	조율된 기술협력 Coordina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연구 조율 Coordinated analytical work	프로젝트단위 약정데이터 완결도 Completeness of project-level commitment data
글로벌공공재국제기구 지원비중 Support of select global public good facilities	수원국에 예정대로 접수기록된 원조 비율 share of scheduled aid recorded as received by recipients	프로그램 원조 활용도 Use of programmatic aid	주요공여기관 평가정책의 질 Quality of main agency evaluation policy
비구속성원조 비중 Share of untied aid	원조집행계획 공지/원조 예측성 Coverage of forward spending plan/Aid predictability		우수 M&E틀을 가진 수원국 지원 Aid to partners with good M&E framework

출처 : 저자작성 (QuODA 2010 보고서 재구성)

3.2. 31개 지표 설명

효율성 증대 (Maximizing Efficiency, ME) : 8개 지표

지표 1. 빈곤국 지원 비중 (Share of allocation to poor countries)

QuODA에서는 공여국들이 가난한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원조의 한계 효과(marginal impact of aid)를 높이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공여국의 각 수원국별 원조지출액에 해당 수원국의 1인당구매력GDP(CGDP)의 로그값을 가중치로써 곱한 뒤 총합을 구한다.

지표 1 = Σ[수원국별 1인당CGDP로그값 × 수원국별 총원조지출액(Gross aid disbursement)]

지표 2. 안정된 거버넌스 보유국가 지원 비중
(Share of allocation to well-governed countries)

QuODA는 우수한 거버넌스를 갖춘 수원국에 대한 지원이 원조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계은행이 작성하는 국가거버넌스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이하 WGI)에서 수원국별 거버넌스 순위를 도출하여 이를 가중치로하여 해당 수원국에 지원된 프로그램지원액과 곱한 뒤, 전체 수원국별로 도출된 값을 더해 지표 2를 계산한다. 지표 1과 달리 원조지출액이 아닌 프로그램화할수있는원조(Country Programmable Aid, 이하 CPA)의 값만을 계산하는 이유는 거버넌스상황을 고려할 수 없이 지원되는 원조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즉, 긴급구호나 인도적 지원 같은 특수상황에서 제공되는 원조가 아닌 공여기관이 국별전략에 따라 계획성을 갖고 배분하는 CPA만을 산정한다.

지표 2 = Σ(수원국별 거버넌스순위 × 수원국별 CPA)

지표 3. 공여국의 낮은 행정비용 (Low administrative unit costs)

공여기관이 행정비용을 경감한다면 수원국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늘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QuODA의 ME부분 지표 3은 행정비용을 측정한다. QuODA는 공여국이 자국 내의 활동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을 늘이고 보다 많은 국내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비용의 순기능을 인정한다. QuODA는 또한 적정행정비용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행정비용은 공여국내 정치적, 법적 체계나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도 인정한다. 그러나, 원조는 수원국에 대한 직접혜택이 우선되어야한다는 논리 하에 행정비용을 낮은 비율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지표는 공여국의 총 CPA를 행정비용으로 나눠 구하며, 행정비용은 DAC 통계 보고자료에서 얻은 값을 활용한다.

지표 3 = 행정비용 / 총 CPA

지표 4. 높은 CPA원조 비중 (High country programmable aid share)

파리선언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원조 증액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CPA란 행정비용과 같이 수원국에 전달되지 않는 원조와 긴급구호와 같은 단발성 원조 및 식량구호와 같이 공여국과 수원국간 정책협의를 통해 지원되지 않는 원조를 제외한 원조를 의미한다. 즉, 공여국이 지원전략에 따라 수원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기획하고 수원국의 개발계획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 원조를 CPA라 한다. QuODA는 수원국 개발계획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여국들이 이렇게 예측가능한 원조 규모를 늘릴 것을

권고한다. QuODA는 CPA비율 계산을 위해 DAC의 CPA정의보다 엄격한 (Stricter) 기준으로 CPA를 계산하며, 이를 sCPA라고 표기한다. DAC CPA는 총 ODA에서 부채탕감, 인도적지원, 식량지원, 행정비용, 공여국내학생 지원비, 개발인식증진비, NGO지원을 제외한 금액인 반면, sCPA는 DAC CPA에서 추가적으로 차관에 대해 상환된 이자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제외한 금액만을 의미한다.

지표 4 = sCPA / 총 ODA

지표 5. 높은 국가 집중도 (Focus/specialization by recipient country)

공여기관의 증가는 개발협력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연구동향에 맞춰, QuODA는 공여기관들이 소액으로 다수의 수원국에 지원하는 행태를 지양하도록 권고한다. QuODA는 무역이론(Balassa, 1965)에서 무역파트너간 상대적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착안하여 공여국의 상대적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이하 RCA)를 측정하여 수원국별 집중도를 계산한다. RCA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RCA = \frac{(\text{공여국의 한 수원국에 대한 원조} / \text{동일수원국에 대한 전세계 원조 규모})}{(\text{공여국의 전체원조 규모} / \text{전세계원조 규모})}$$

만약 RCA값이 1 이상이라면, 공여국은 대상 수원국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공여국이 지나치게 많은 수원국에 지원을 수행하거나, 다른 공여국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RCA값은 낮아진다.

지표 5 = Σ(RCA 〉 1 이상인 수원국에 대한 CPA / 수원국별 CPA)

지표 6. 높은 분야 집중도 (Focus/specialization by sector)

지표 5의 국별 집중도와 함께 QuODA는 분야별 집중 또한 권고하고 있으며, 지표 5와 동일한 논리를 준용하여 각 공여국의 분야별 집중지원 정도를 산정하고 있다. 단, 금액 산정에는 DAC CRS보고서 상에 직접적으로 해당 분야에 지원된 실적만을 활용하고 있다.

$$RCA = \frac{(\text{공여국의 특정 섹터에 대한 원조} / \text{동일 섹터에 대한 전세계 원조 규모})}{(\text{공여국의 모든 섹터에 대한 전체원조 규모} / \text{전세계 원조 규모})}$$

지표 6 = Σ(RCA 〉 1 이상인 분야에 대한 CPA / 섹터별 CPA)

지표 7. 글로벌공공재국제기구 지원비중

(Support of select global public good facilities)

공공재의 특성인 만성적 공급부족으로 인해 빈곤감소와 관련된 글로벌공공재(Global Public Goods, 이하 GPG)에 대한 지원은 종종 타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QuODA는 GPG 지원을 위해 설립된 11개의 다자 이니셔티브[12]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비율을 지표 7 계산에 사용한다.

지표 7 = 9개 GPG관련 다자기구 지원 / 총 CPA

9개의 다자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맨 아래의 기후변화 관련 2개 기관은 2차 평가에서 추가된 기관들이다.

≫ Advance Market Commitments (AMC)
≫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Multi-Donor Trust Fund (EITI-MDTF)
≫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
≫ Global Forum for Health Research (GFHR)
≫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s (IFFIm)
≫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3ie)
≫ Montreal Protocol Fund (MPF)
≫ United Nations Peacekeeping
≫ Clean Technology Fund
≫ Strategic Climate Fund

지표 8. 비구속성원조 비중 (Share of untied aid)

원조효과성 관련 빠지지 않는 지표인 비구속성 비율은 효율성증대 분야의 마지막 지표이다. DAC CRS를 활용하여 비구속성원조를 계산하였고, 부분구속성원조(Partially Tied)에 대해서는 0.5의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였다.

지표 8 = (비구속성원조 + 부분구속성원조 × 0.5) / 총 ODA

12) 1차 평가에서는 9개 기관이었으나 11개로 증가함.

제도 배양 (Fostering Institutions, FI)

지표 9. 수원국 우선 개발과제 지원비중

(Share of aid to recipients' top development priorities)

주인의식 강화를 위해 수원국의 중점개발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도록 국제원조사회는 요청해왔다. QuODA는 지표 9를 통해 공여국들이 실제 수원국 개발 우선 분야에 대한 지원액을 조사하였다. QuODA는 기존의 다양한 서베이[13]들을 통해 수원국별 중점개발분야를 확인하였다. 공여국-수원국별로 조합을 만든 뒤 공여국이 수원국 중점개발분야에 제공한 원조액을 계산하고, 이를 총원조액으로 나누었다. QuODA는 모든 공여국-수원국 조합에 대해 이렇게 중점 개발분야 지원액 비율을 계산하고 합을 내어 지표 9를 산정하였다. 일반재정지원은 수원국이 자신들의 중점분야에 지원금액을 활용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그대로 중점개발우선분야에 지원된 금액으로 포함하였다.

지표 9 = 수원국 중점개발분야에 대한 ODA지출총액 / ODA지출총액

지표 10. PIU활용 최소화 (Avoidance of project implementation units, PIU)

공여국들의 PIU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추진에 이로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원국 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 QuODA의 판단이다. 프로젝트실행조직 즉 PIU는 수원국 기존의 제도 및 행정 구조에 편입되지 않는 조직으로 관리구조의 이원화를 유발하며 따라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저해하고 수원국 역량강화 저해, 급여체계 왜곡,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전가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갖는다. PIU의 감소는 파리선언의 모니터링 지표 6번이기도 하다. QuODA는 파리선언 모니터링서베이 보고서의 PIU 값과 총 CPA를 비교하여 비율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지표 10을 산정하였다.

지표 10 = PIU / 총 CPA

지표 11. 수원국 예산에 기록된 원조 비중

(Share of aid recorded in recipient budgets)

수원국의 주인의식은 공여국의 예측불허 원조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개발계획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동원 가능한 예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여국들이 약속된 지원을 취소, 연기하는 등 적기에 투입

13) QuODA가 사용한 서베이는 World Value Survey, the World Bank Gallup World Poll, Afro-barometer, Euro-Barometer, Latino-barometer이다.

하지 못한다면 수원국 개발계획 집행과 결과적으로 원조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QuODA는 공여국들의 지원이 가능한 수원국 예산에 기록되도록 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QuODA는 파리선언 모니터링 지표 3번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파리선언 지표 3번은 '수원국 예산에 통합된 원조'로서 공여국의 지원이 수원국 우선순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별 지원 총규모 대비 정부부문에 제공된 원조비율 계산하여 지표로 활용한다. QuODA는 파리선언 지표 3번 데이터를 전체원조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지표 11번을 산정한다.

지표 11 = Σ수원국 예산에 반영된 원조 / 총 ODA

지표 12. 우수실행전략을 보유한 수원국 지원 비중
(share of aid to partners with good operational strategies)

효과적인 실행전략은 수원국의 장기개발을 촉진하고 공여국의 지원방향 결정시 로드맵으로 활용된다. 특히, 공여국들은 우수한 실행전략을 보유한 수원국에 원조를 집중하여 수원국 시스템 활용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QuODA는 이러한 맥락에서 양질의 실행전략을 보유한 수원국에 지원확대를 권고한다. '양질의 실행전략 보유 여부'는 역시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를 활용하여 도출했다. 파리선언 지표 1은 실질적으로 수행가능한 양질의 실행전략을 보유한 수원국들에 대한 평가이고 2011년 모니터링 서베이는 약 37%의 수원국들이 상위 2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QuODA는 각 공여국들의 총 CPA 중 서베이에서 상위 2개 등급(A, B)를 받은 수원국에 대한 원조와 3등급(C)를 받은 수원국에 대한 원조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지표 12 = Σ[(A, B등급 수원국에 대한 CPA + 0.5 × C등급수원국에 대한 CPA) / 총 ODA]

지표 13. 수원국 시스템 활용 (Use of recipient country systems)

파리선언은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이하 PFM) 시스템을 활용한 원조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QuODA 또한 파리선언의 관련지표인 '5a 수원국 PFM 활용'와 '5b 수원국공공조달시스템 활용' 서베이 결과를 활용하여 지표를 산정하였다. 즉, 전체수원국에 대한 5a결과값과 5b결과값의 평균값이다.

지표 13 = Σ[(PFM을 활용하여 지원된 원조액 / 정부부문총지원액) +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된 원조액 / 정부부문 총지원액)] / 2

지표 14. 조율된 기술협력 (Coordina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조율된 기술협력 역시 파리선언의 이행지표 중 하나이다. QuODA는 파리선언 지표 4인 조율된 기술협력 비율에 대한 2011년 모니터링 결과로 동 지표를 산정했다.

지표 14 = 조율된 기술협력 / 전체 기술협력

지표 15. 수원국에 예정대로 접수기록된 원조 비율

(Share of scheduled aid recorded as received by recipients)

예측가능하고 수원국에 배분이 기록되는 원조는 수원국정부의 자원활용 관리능력 배양을 도우며, 장기 개발 계획 수립에 유용하다. 파리선언은 공여국들이 배분하기로 약속한 연도 내에 배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QuODA는 파리선언 지표 7번을 활용하여 원조의 단기예측가능성을 측정한다. 파리선언 지표 7은 정부부문 총지원액 중 수원국 정부에 의해 배분된 것으로 기록된 원조 비율을 측정한다.

지표 15 = 수원국에 기록된 원조배분액 / 정부부문 총지원액

지표 16. 원조집행계획 공지/원조 예측성

(Coverage of forward spending plan/Aid predictability)

지표 16은 원조의 중기예측가능성을 측정한다. 2008년 DAC는 원조예측성 보고서(Report on Aid Predictability)를 발간하고 후속 조치로 매년 공여국들의 향후 3년간 약정액과 CPA의 비율을 조사했다. QuODA는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각 공여국들이 응답한 약정액과 집행된 CPA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2012년까지 모든 수원국에 대해 원조집행계획을 보고한 공여국은 100%를 받는다.

지표 16 = 총 CPA 중 3년 예측가능성이 있는 CPA 비율

행정부담 경감 (Reducing burden, RB)

지표 17. 원조관계의 중요성 (Significance of aid relationships)

행정비용은 원조 효용성을 저해한다. 공여국들은 수원국내 원조사업들의 분화를 막음으로써, 수원국의 행정비용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QuODA에서 원조관계의 중요성이란 각 공여국의 수원국 행정비용에 대한 한계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화폐단위당 행정비용은 수원국내공여국들의 원조집중과 반비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 국별 허쉬만-허핀달 지수(Hirfindahl-Hirschman Index, 이하 HHI)[14]를 계산한다. 수원국 HHI

에 대한 공여국의 한계기여도(marginal contribution)는 공여국의 총 CPA로 가중치가 부여된 공여국의 수원국내 지원액의 제곱의 합이다. 즉, 지표 17은 작은 수의 수원국에 대규모 원조를 집중하는 공여국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지표 17 = 2 × 특정수원국내특정공여국의CPA^2 / 특정공여국총CPA × 수원국총CPA^2

지표 18. 공여국내 원조기관 분절화 (Fragmentation across donor agencies)

어떤 공여국들은 다양한 기관들이 원조를 수행한다. 공여국-수원국 관계를 줄여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원조를 지원하는 제도적 흐름을 축소하는 것이 원조효율성 증진에 바람직 할 것이다. QuODA는 DAC 자료를 활용하여 HHI를 준용하여 원조수행의 집중도를 측정했다. QuODA는 공여기관 분절화 측정을 위해 각각 원조수행기관이 공여국 전체 원조에서 차지하는 몫의 합을 제곱하여 분절화 측정용 HHI를 산출하였다. 만약 공여국이 한 기관만을 통해 원조를 수행하면 HHI값은 1이다. 원조수행기관의 수가 늘수록 개별기관의 몫은 줄고 HHI는 0에 수렴한다. 조사대상 중 약 1/3의 국가는 단일한 원조집행 채널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지표 18 = Σ(공여기관별 총 CPA / 총 $CPA)^2$

지표 19. 프로젝트규모 중간값 (Median project size)

많은 수의 소규모 프로젝트의 고정비용은 원조의 질을 저해한다. 이상적인 프로젝트 규모는 없지만 적은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QuODA의 논거이다. 만약 5만불 프로젝트와 30만불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동일한 고정비용이 소요된다면 수원국에게는 30만불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부담을 갖게 할 것이다. 즉, 지표 19는 수원국내 공여국의 분절화 정도를 보여준다. QuODA는 DAC CRS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여국별 프로젝트 중앙값을 구했다. 많은 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 평균값대신 중앙값을 사용한 것이다. CRS에 보고된 개발행위를 동일한 수원국, 제목, 시작일을 갖는 것들을 묶어 프로젝트화한 뒤, 25만불 이하 프로젝트를 제거했다. 이를 통해 2009년 기준 18,500개의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보다 큰 중앙값을 갖고 있는 공여국에 가점을 부여했다.

지표 19 = log [약정액 기준 프로젝트 사이즈의 중앙값]

14) HHI는 원래 산업 내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여 경쟁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0에서 2 사이의 값으로 표시되며 2에 가까울수록 집중도가 높다는 뜻을 의미한다. 기업을 매출액이나 자산규모 순으로 배열하고 시장점유율을 각각의 %로 계산한 후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지수이다.

지표 20. 다자기관 지원비율 (Contribution to multilaterals)

일반적으로 다자지원은 이전비용을 줄이고 공여국간 원조조화를 높인다는 점에서 확대를 권고받고 있다. QuODA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각 공여국별 전체 ODA에서 다자지원 비율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다자지원은 멀티-바이(Multi-bi)[15] 지원을 제외한 지원만을 의미한다.

지표 20 = 다자지원금액 / 총 ODA

지표 21. 수원국 방문 조율 (Coordinated missions)

원조사업 수행을 위해 공여기관 직원, 공여기관이 채용한 컨설턴트들, 개발협력관련기관 직원 등의 빈번한 수원국 방문 및 출장과 자료 요구 등은 수원국 당국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 심지어, 수원당국에게 회의 의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또는 수원당국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의일정을 잡는 공여국의 사례도 있다. 2008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당시 서베이에 참가한 수원국들에서만도 연간 14,000개의 조사단, 즉 평균 282개의 공여국 조사단이 수원국에 파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QuODA, 2012). 가장 심한 경우였던 베트남은 2007년 일년 동안 752개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QuODA, 2012). 파리선언 지표 10a이기도한 공동조사 증대는 각종 명목으로 파견되는 조사단 방문 횟수를 줄여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에서 선택되었고 QuODA의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되었다. QuODA는 2011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 결과를 활용하여 지표 21을 산정하였다.

지표 21 = 공동조사단 파견 숫자 / 전체조사단 파견 숫자

지표 22. 연구 조율 (Coordinated analytical work)

공여국은 수원국 개발노력 지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정책대화 강화, 국별전략 개발 및 이행에 필요한 분석 및 권고 등을 수행한다. 국가분석작업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조사와 연구들로, 국별, 분야별 연구 및 전략, 국별평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파리선언은 공여국의 이러한 수원국 국가분석작업을 가능한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공동국가분석작업은 수원국 정부의 행정비용 감소, 공여국들의 중복작업 방지 등의 이점이 있다. 그밖에 수원국 정부와 공여국들 간 긴밀한 협조체제 및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해준다. 파리선언 지표 10b이기도 한 공동연구증대는 역시 연구, 조사의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초래되는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경

15) 지정기여금(Non-core contribution)이라고도 하며,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정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사업 형태로 이러한 지원은 DAC에는 양자지원으로 계상된다.

감하자는 의미에서 QuODA의 지표가 되었다. QuODA는 2011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 결과를 활용하여 지표 22를 산정하였다.

지표 22 = 공동연구 숫자 / 전체 연구 숫자

지표 23. 프로그램 원조 활용도 (Use of programmatic aid)

프로그램에기초한접근법(Programme-based Approach, 이하 PBA)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통된 방식을 사용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원조들과 프로젝트원조들을 의미한다. DAC는 PBA를 국가개발전략, 분야별 프로그램, 주제별 프로그램, 또는 특정기관의 프로그램과 같은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조율된 지원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협력활동으로 정의한다. PBA의 비율은 파리선언 지표 9이며 QuODA도 2011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지표 23을 산정한다.

지표 23 = PBA / 전체 Aid

투명성과 학습 (Transparency and learning, TL)

지표 24. IATI 가입여부 (Signatory of IATI)

투명성 증대는 원조 효과성 증진과 원조관련 부패 저감을 위한 저비용 도구라는 (Collin and others, 2009) 연구결과들에 따라 파리선언 이후의 국제원조사회의 효과성 관련 논의동향은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새로운 논의인 투명성 증대를 원조의 질 평가에 포함하기 위해 QuODA는 첫 번째로 투명성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공여국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로 하였고, 그 첫 번째 지표가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16]가입여부 확인이다. IATI 가입여부는 투명한 원조업무 수행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QuODA도 인정하고 있으나, 가입여부로 공여국들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논거를 기반으로 동 지표를 측정하고 있다. 2011년 평가결과 31개 공여국 중 22개국이 IATI 가입국임을 확인했다.

지표 24 = IATI가입여부 질문에 대한 네/아니오 응답 결과

16) IATI는 공여국, 수원국, 시민사회 등을 포함하는 기구로 원조 투명성 증대를 위한 공통된 기준을 확립하는데 노력한다. IATI는 2008년 아크라회의(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담)에서 원조사업들에 관한 정보보고체계를 일원화하는 기준을 설립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표 25. IATI 보고기준 활용 (Implementation of IATI data reporting standards)

지표 25는 1차와 달리 2012년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IATI 가입국 여부 확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여국들이 IATI의 기준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IATI는 원조집행관련 주요정보가 적기에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형식으로 모두 열람가능하게 보고되느냐를 기준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 IATI는 단계적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 2011년 2월 제1차 IATI 기준(Phase I of IATI Standard)이 합의되었다. 양자원조기관, NGO, 기금 등의 공여기관들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원조활동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2011년 평가에 따르면 31개 공여국 중 14개가 IATI 보고시스템에 데이터 입력을 시작했다.

지표 25 = IATI데이터 보고여부 질문에 대한 네/아니오 응답 결과

지표 26. 프로젝트명과 개요 기록 (Recording of project title and descriptions)

DAC회원국들은 DAC CRS 데이터베이스에 원조관련 정보들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DAC통계는 실제로 현재 원조 집행 관련 가장 포괄적인 정보량을 갖고 있다. CRS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프로젝트들의 분야, 지역, 국가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QuODA는 공여국들이 이러한 주요정보들을 입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지표 26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QuODA는 2009년 기준으로 공여국들이 각각의 원조활동(Aid Activity)에 대해 입력한 데이터필드들의 평균값을 산출했다.

지표 26 = 입력된 Key Field들 / 전체 Key Field

지표 27. 프로젝트설명자료 (Detail of project descriptions)

QuODA는 공여국들이 원조활동에 대한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조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QuODA는 AidData의 세부정보입력필드의 글자 수 평균의 로그값을 통해 지표 27을 산정한다.

지표 27 = Log(프로젝트별 세부정보입력필드의 입력된 글자수 / 프로젝트별 세부정보입력필드수)

지표 28. 원조분배채널 보고 (Reporting of aid delivery channel)

공여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을 수행한다. 양자원조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NGO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양자원조기관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등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QuODA는 공여국들이 이러한 원조채널에 관해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조수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권고한다. DAC회원국들은 CRS에 원조채널을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QuODA는 동 정보를 활용하여 지표 28을 계산한다. 먼저 원조채널이 보고된 프로젝트 비율을 구하고, 프로젝트 크기별로 가중치를 주어 지표를 산정한다.

지표 28 = 원조채널이 입력되어 보고되는 aid / 전체 aid

지표 29. 프로젝트단위 약정데이터 완결도

(Completeness of project-level commitment data)

QuODA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조지원총액 등의 포괄적인 데이터 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보고 강화를 권고한다. 이를 위해 DAC에 보고된 전체 지원약정액과 CRS에 같은 해에 보고된 프로젝트별 약정액의 비율을 확인한다. 즉, 전체지원액이 1억불인 공여국이 같은 해에 CRS에 프로젝트레벨에서 프로젝트약정액을 5천만불이라고 보고했다면 이 공여국은 50%를 지표 값으로 갖게 된다.

지표 29 = |1 – 프로젝트약정보고액 / 전체약정보고액|

지표 30. 주요공여기관 평가정책의 질 (Quality of main agency evaluation policy)

이 지표는 이번 2차 평가에 신설된 지표로서 공여기관들의 평가와 학습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관련 정보가 미흡한 관계로 QuODA는 DAC 가이드라인에서 차용한 5개 기준에 대해 공여기관들의 평가정책을 점검했다. DAC의 'Evaluating Development Cooperation: Summary of Key Norms and Standards'에 나타난 국제기준에 따라서 QuODA가 도출한 5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단일한 정책 문서 보유 유무 0.5점
2. 평가 독립성 증대를 위한 장치에 대한 설명 0.5점
3. 모든 평가보고서의 일반인 열람가능성 적시 0.5점
4. 평가결과와 제언이 향후계획에 반영될 체계를 기술했는지 유무 0.5점
5. 평가대상을 설명했는지 유무 0.5점

지표 30 = 상기 5개 기준에 대한 평가결과 (0-2.5점 사이)

지표 31. 우수 M&E틀을 가진 수원국 지원

(Aid to partners with good M&E framework)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이하 M&E)체계는 사업수행 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정책과 사업의 결과를 평가함으로서 예산 확보와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 정부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는 점에서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수원국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여국은 건전한 M&E 시스템을 갖춘 수원국에 원조를 증액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선언의 지표 11 성과중심관리는 수원국의 원조사업계획 대비 결과 관리 여부와 사업결과의 정책결정 반영 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QuODA는 파리선언 지표 11의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에 가중치를 두어 지표 31을 계산하였다. 파리선언 지표평가에서 상위 2개 점수 (A 또는 B)를 받은 수원국에 대한 CPA는 전액을 그대로, 중간점수(C)를 받은 수원국에 대한 CPA는 0.5의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표 31 = Σ(총 CPA × M&E점수별 가중치 / 총 CPA)

3.3. QuODA의 의의와 한계

QuODA는 CDI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ODA의 특성에 맞추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반영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지표를 추가로 생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원조효과성관련 논의와 연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현재 활용 가능한 통계를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질을 저하하게 되는 역효과를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QuODA는 ODA수행환경의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QuODA는 ODA가 단일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드물며,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관여하여, 기관별로 원조효과성에 대한 책무성이 다르다는 현실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평가를 이원화하여 국가별 평가(Country Level)와 원조기관별 평가(Agency Level)를 실시하여 원조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스스로의 의무와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원조의 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QuODA는 기관별, 국가별로 원조의 질이 정량적인 지표로서 나열되므로 국제적인 신뢰도와 체면유지를 위해 각 국가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 공여국들에게 이러한 정책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QuODA가 과연 이러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개선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QuODA 지표산정에서의 한계와 내용적인 면의 추가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 지표의 한계 1 : 가중치 산정의 복잡성과 다대성에 의한 문제

QuODA의 지표 1, 2, 12, 31을 통해 가난하거나, 거버넌스가 좋거나, 실행가능한 국가전략을 보유하거나, 우수한 M&E 시스템을 갖춘 수원국에 대한 지원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한번 이상 해당되는 수원국은 106개국이다. 이는 지표 5에서 수원국의 수를 줄이라고 하는 권고사항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것이다. 특히 지표별로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가난하면서도 거버넌스가 우수한 국가 수가 적기 때문에 거버넌스 가중치 순위 30위권 안의 국가 중 LDC 또는 LIC는 단 6개국(사모아, 바누아투, 투발루, 가나, 부탄, 키리바티, 레소토) 뿐이며, 가나를 제외한 5개국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대상국도 아니다. 즉, 지표 2를 통해 가중치를 받기위해서는 UMIC나 LMIC에 지원을 늘려야하는 한편, 지표 1의 가중치를 받기위해서는 LDC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 지표의 한계 2 : 평가대상인 원조수행방식과 평가목적인 원조의 질 향상간의 논리적 연계성 취약

QuODA는 ODA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원조수행방식(Aid Delivery System)을 평가한다. 그러나, 원조의 질이 높다는 것은 원조수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고 따라서 원조의 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평가는 개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등 원조행동(Aid Activities)의 효과성 평가결과가 된다. 개발 원조행동들이 각각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한다면 각 원조행동의 질이 높은 것이고, 어떤 공여국의 원조를 분석했을 때 이러한 양질의 원조행동들의 비율이 높다면 이 공여국은 원조의 질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통적인 분석은 정량적인 국별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QuODA, 파리선언 등은 원조수행체제가 효율화되면 원조 자체가 효율화 될 것이라는 논리하에 원조수행체제를 평가하여 정량적으로 순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리지표(proxy)를 사용하는 평가의 경우 proxy가 정말 원하는 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한다. 즉, 평가하려는 것이 달이라면 가능한 달과 유사한 행성을 평가대상으로 삼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평가하면서 달의 대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QuODA의 지표들이 일부는 원조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적어도 단기간의 측면에서는 큰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표 9번인 글로벌공공재에 대한 지원은 효율성 증대의 한 항목으로 보기에 시기상조일 수 있다. 글로벌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모든 국가와 세대에 혜택이 확장되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다 (조한슬, 2011). 그러나, 아직까지 글로벌

공공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합의된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지원의 수혜자는 개발도상국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과소한 원조자금을 이러한 보편적 공공재에 활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다.[17]

한편, 기준 4인 투명성과 학습(Transparency and Learning)의 투명성과 관련한 보고체계와 질 제고관련 지표들(지표 24, 25, 26, 27)도 원조의 질 제고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여국들이 DAC의 통계시스템과 CRS 시스템, AidData의 시스템에 자세한 프로젝트 수행현황을 보고하는 것은 원조의 질이 높아져서 수원국 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관련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는 특히 역으로 소규모 원조를 시작하고 있는 비영어권 국가의 신흥공여국에게는 관련데이터를 영어로 번역하여 적시에 보고하는데 추가적인 행정부담으로 이어져 QuODA 지표 3이 지양하는 공여국 행정비용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신흥공여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적 고려사항들에 별도로 서술).

■ 지표의 한계 3 : 통계와 데이터의 신뢰성

QuODA는 DAC나 파리선언 서베이, WGI 등 기존에 생성된 통계와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통계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수의 신뢰성과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파리선언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관련 통계 기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국별로 상이하여 데이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미 2008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에서도 수원국과 공여국들의 자의적인 기준해석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WGI의 경우 거버넌스 수준 측정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기는 하나, 지표들이 차용하고 있는 원데이터들이 “전문가의 견해(Expert Perception)”의 설문조사로서 주관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결과이므로 데이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있다.

■ 내용적 고려사항 1 : 유럽전통공여국의 원조방식에 기초한 기준설정

원조효과성 증대와 관련된 평가는 50여년 이상의 원조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공여국의 원조수행체제변화에 맞춰 개발되었다. 따라서 QuODA는 유럽공여국들의 경험을 주로 반영하여 원조수행방식 상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조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는 신흥공여국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체적인 원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원조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적절한 연구나 조사 등을 문화에 맞춰 수행하지 못하여 신흥 공여국의 원조시스템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표 10은 원조업무

17) 글로벌공공재와 개발협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한슬 저 “개발성과제고를 위한 글로벌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KOICA, 2011) 참조.

수행시 별도의 프로젝트수행조직(PIU)을 만드는 관행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나 유럽식 원조의 단점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프로젝트 수행조직을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며, 이제 원조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평행 PIU의 설치가 증대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QuODA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무조건적인 평행 PIU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원조산업과 시스템의 국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표 21, 22인 공동조사와 연구 강화도 역시 신흥공여국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Like-Minded Donor 그룹 등 다양한 협조체제를 이미 여러 해 동안 구성, 운영해왔으며, 지리적,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유럽전통공여국들에게 공동조사업무는 기존의 협력체계 강화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지리, 체제, 경험이 상이한 신흥공여국들이 타 공여국들과 공동조사나 연구를 갑작스럽게 증대하고 그간의 자체적인 연구와 조사업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공동 사업의 증대는 이전비용이나 행정비용 감소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서구공여국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흥 공여국의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여 결국 수원국 입장에서는 선택가능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내용적 고려사항 2 : 과도한 이전비용 소요로 인한 한정된 재원 부족현상 심화

신흥공여국은 원조수행방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역사와 경험이 짧아 상대적으로 변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 이로 인해 원조를 위한 한정된 재원을 원조수행체제 변화를 위해 소모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수원국으로 지원되어야할 원조액수의 감소로 이어지며, 재원부족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AidDATA에 다량의 새로운 데이터 입력이나 CRS 통계기준 해석을 통한 데이터 입력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노력은 신흥공여국의 행정비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표 3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흥공여국은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할 수 있다.

■ 내용적 고려사항 3 : 원조분업화시스템에서 틈새시장 선점의 어려움

QuODA의 지표 5, 6은 분야별, 지역별 비교우위를 갖는 곳에 공여국들이 지원을 집중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원조수행경험이 짧으며 수원국 상황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흥공여국들은 이러한 분업화된 시스템에서 이미 원조수행기반을 공고히 구축한 DAC 공여국들보다 우위를 갖는 분야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파리선언을 통해 원조분업과 원조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신흥공여국들은 기존 공여국과 대비되는 특색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림자공여국(Shadow Donor)으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내용적 고려사항 4 : 원조수행업체 성장 촉진 필요

파리선언은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를 통한 원조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비구속성 원조는 지원액 중 대부분이 공여국 내의 기자재구매나 인건비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지원액이 과소하다는 오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비구속성 원조를 위한 논의는 기존 DAC 공여국의 원조수행업체나 기관의 전문성을 보장하여 원조업무에 참여하려는 신흥공여국이나 수원국의 관련기관 참여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신흥 공여국이 비구속성 원조 방침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업체를 선정하려 한다면 신흥 공여국의 경험이 일천한 기관이나 업체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를 쌓아온 기존 공여국의 업체나 기관이 수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신흥공여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원조관련 자체적인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비구속성 원조를 통해 유능한 업체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원조가 결국 납세자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며 공여국과 수원국의 상생을 도모한다고 할 때 신흥공여국 납세자로서는 자신들의 세금이 전통공여국의 기관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흥공여국에게 공여국내의 납세자들에 대한 원조수행의 정당성을 보다 더 잘 이해시키고 또한 타공여국과 수원국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책과 연구결과를 제안하기 위해서라도 신흥공여국이 자체적인 원조관련 업체와 기관을 성장시킬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내용적 고려사항 5 : 국민정서와 QuODA의 원조효과성 논리사이의 간극

신흥공여국에서 원조에 대한 납세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납세자들에게 원조의 가시성(Visibility)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식민지 경영 경험에 따른 역사적 부채의식이 없고, 보편타당한 가치나 종교 전파와 같은 의지가 적은 신흥공여국으로서 자국이 아닌 타국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국의 원조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작업은 원조수행 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신흥공여국들은 직접적인 양자원조나 멀티바이(Multi-bi)형식의 다자성양자원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한편, QuODA의 논리는 이러한 신흥공여국의 입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파리선언을 주도하는 유럽공여국들은 오랜 식민지경영 경험에 따른 부채의식, 개발원조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회성의 가시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발전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QuODA

는 비구속성 원조를 통한 실질지원액 증가 뿐 아니라, 공동사업추진이나 재정지원 등 원조집행의 가시성이 적은 형태를 지향한다. 수원국에 대한 의무감이나 부채의식이 적은 상태에서 공여국 내에서 원조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신흥공여국들이 이러한 원조를 수행할 때에는 원조를 부담하는 자국 내 납세자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원조액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내용적 고려사항 6 : 문화, 언어 등의 차이에 대한 고려 미흡

많은 공여국들이 자신들과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수원국에 원조를 지원한다. 북유럽국가의 경우 정책적으로 고채무빈곤국이나 최빈개도국을 지원하고 있으나, 안보, 외교, 경제 등의 고려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영국의 경우, 이전 식민지인 영연방국가에 대한 지원이 크며, 프랑스의 경우도 이전 식민지이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주요 수원국가이다. 스페인의 경우도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이전 식민지국가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즉, 유럽의 전통공여국의 경우, 주요 수원국가가 이전 식민지로 공여국 정부와 유사한 정치, 사회 제도와 체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력들이 존재하여, 수원국 제도와 정부체제를 이해하고 수원국에서 현지인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적다.

그러나, 신흥공여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원국가의 상이한 정치, 사회, 경제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더 크며, 따라서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한 원조 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요소가 더 많다. 현지인력활용을 증가시키려 해도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인력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며 고용된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어, 영국이 나이지리아나 가나, 탄자니아에서 영어와 현지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개발원조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는 쉬워도 한국이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어와 현지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 영어와 현지어만 구사하는 인력을 고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한국어로 작성되는 대부분의 공문서 작성에서는 배제되어 주요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워진다.

3.4. QuODA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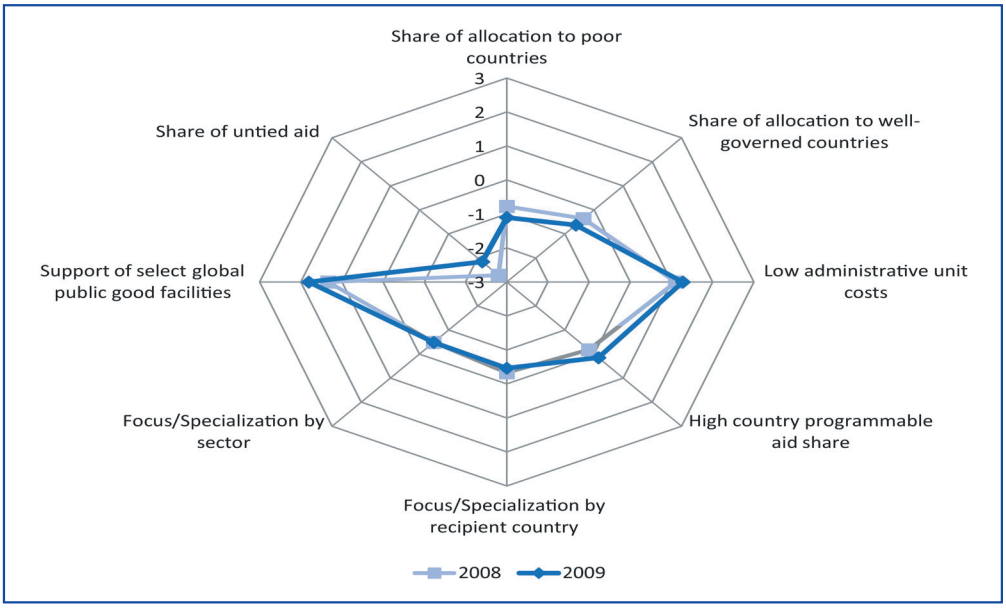
이제 QuODA가 우리나라의 원조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CDI와 달리 QuODA에서 우리나라는 큰 진전을 보인다. 아래 [표 6]에 나타나있듯이 첫 번째 평가에서는 제도개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꼴찌였으나 2009년 자료로 실시된 두 번째 평가에서는 효율성 증대는 10위, 투명성과 학습은 12위나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파리선언 모니터링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원조를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온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표 6] 1, 2차 QuODA 평가결과

	효율성 증대	제도개선	부담경감	투명성과 학습
2008	30	16	31	30
2009	20	15	30	18

이제 지표별 결과변화를 보면,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3개 지표 (공여국의 낮은 행정비용(Low administrative unit costs), 높은 CPA원조 비중(High CPA share), 글로벌공공재국제기구지원비중(Support of select GPG facilities))에서 평균 이상의 평가 결과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공공재국제기구지원 비중(Support of select GPG facilities)부분은 1.8점의 z-score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기록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비구속성원조 비중(Share of untied aid) 부분으로 '비구속성 원조 확대 계획[18]'에 따른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빈곤국 지원 비중(Share of allocation to poor countries) 지표가 -1.1로 효율성 증대 측면 8개 지표 중 비구속성 원조 비율 지표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2005년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이후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점차 증가시켜왔다.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효율성 증대 (Maximizing Efficiency) 8개 지표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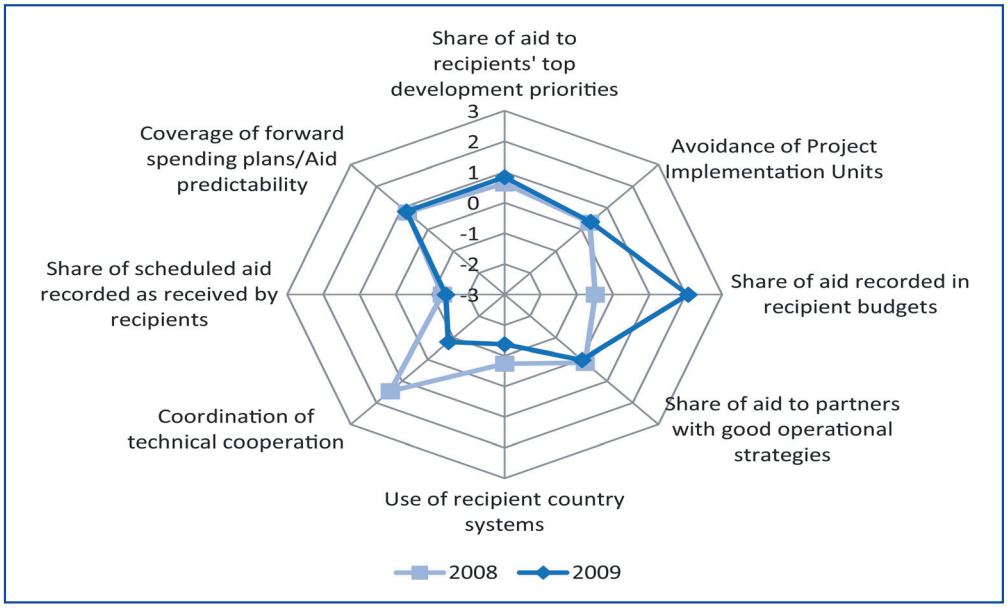
출처 : 저자 작성, QuODA 2008, 2009 평가 데이터 재구성

서구공여국에 비해 짧은 원조경험을 가진 우리나라가 제도개선(Fostering Institution) 측면에서 15위를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다. 2008년도와 비교하여 우리

18) 우리정부는 2015년까지 무상원조 100%, 유상원조 50%를 비구속화 할 계획이다.

나라는 특히 수원국 예산에 기록된 원조 비중(Share of aid recorded in recipient budgets)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8개 지표 중 수원국 시스템 활용(Use of recipient country systems), 조율된 기술협력(Coordina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수원국에 예정대로 접수기록된 원조 비율(Share of scheduled aid recorded as received by recipients)이라는 3개 지표에서만 평균이하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율된 기술협력(Coordination of technical cooperation)인데, 이 지표는 2008년 대비 오히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동 지표는 파리선언 지표 7과 동일한 것으로서 기술협력사업을 수원국 개발계획에 맞추어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원조기관들의 노력이 촉구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Use of recipient country systems) 부문도 2008년 대비 상대적으로 후퇴한 결과가 나타났다. 수원국의 시스템 사용은 모니터링과 평가가 어렵고,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여국은 수원국별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선진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높다. 따라서, 향후 수원국시스템 평가(파리선언 지표 2a, 2b)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수원국 중 1-2개 국가를 선정하여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한 원조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림 5] 제도개선(Fostering Institution) 8개 지표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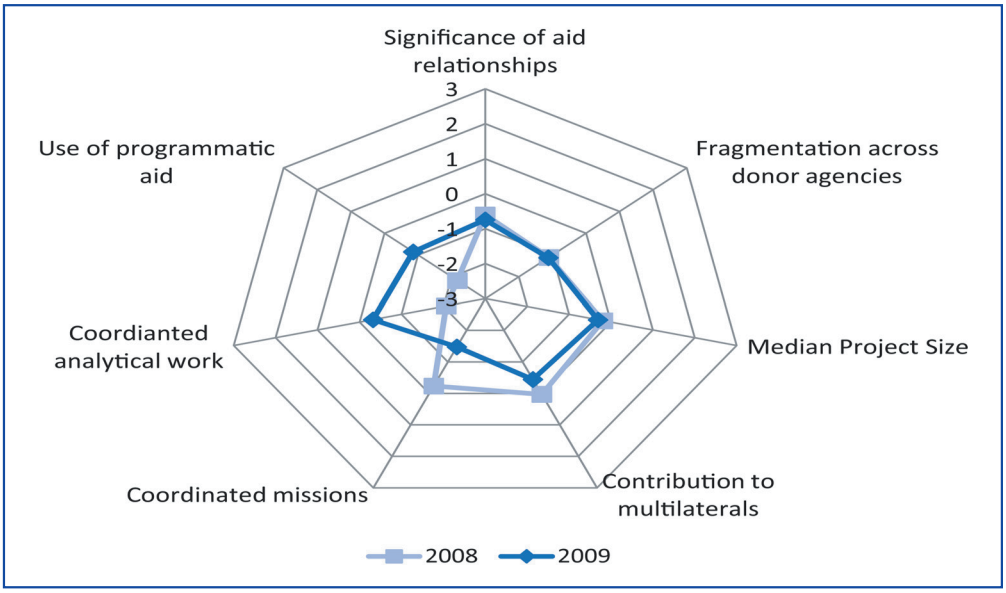


출처 : 저자 작성, QuODA 2008, 2009 평가 데이터 재구성

수원국의 행정부담 경감(Reducing Burden on Recipient)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이다. 연구 조율(Coordinated analytical work)과 프로그램 원조 활용도(Use of programmatic aid) 2개 지표를 제외한 5개 지표가 2008년에 비해서 오히려 나빠진 결과를 보였다. 특히, 수원국 방문 조율(Coordinated missions) 지표의

저하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사업량 증가와 분절화에 따른 조사단 파견 숫자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젝트 중앙값 개선은 우리측과 수원국 모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며 따라서 무상사업의 단위사업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단위사업비를 증대하고 사업수를 줄이는 것은 PIU활용 최소화(Avoiding PIU)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위사업비 증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는 데이터 부족으로 공여국내 원조기관 분절화(Fragmentation across donor agencies) 지표에서 제외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44개 기관이 ODA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분절화된 체제가 지속될 경우 차년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원조 분절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자기관 지원비율(Contribution to multilaterals)는 다자원조의 비중을 전체 원조의 30%[1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기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다자원조 증대 계획에 따라 비율이 30%까지 증대된다 하더라도 다자원조증대계획이 준용한 다자원조 계산방식과 QuODA가 준용하는 DAC의 계산방식이 같지 않아 실제 QuODA 지표상에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DAC의 기준에서 다자원조는 최종수원국을 지정하지 않고 다자기구에게 지원액의 사용방법과 사용처 등을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비지정기여금(core contribution)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자원조증대계획에서는 이러한 비지정기여금과 함께 다자성양자원조(Mulit-bi aid 또는 non-core aid) 또한 다자원조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동 계획에 따라서 다자원조가 총 원조의 30%까지 증대된다하여도 DAC 통계상 보고될 다자원조 비율과 금액은 그 보다 더 작을 것이다.

[그림 6] 수원국의 행정부담 경감(Reducing Burden on Recipient) 7개 지표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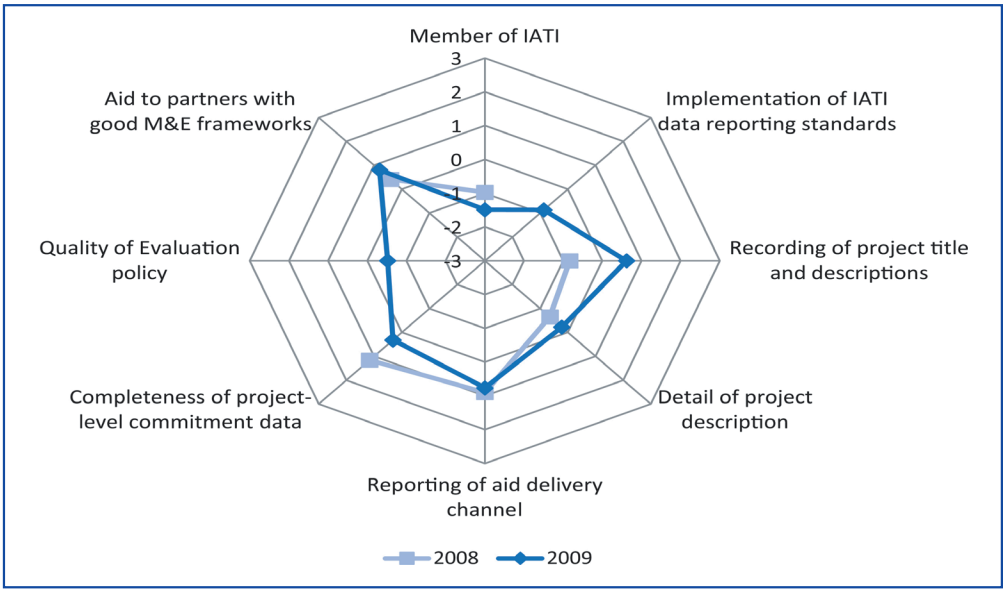


출처 : 저자 작성, QuODA 2008, 2009 평가 데이터 재구성

19) 30%는 Multi-bi 금액이 포함된 비율이다.

투명성과 학습(Transparency and Learning) 측면은 거의 전 부분에서 개선을 보였다. 단, 2009년에 변경된 지표 2개 (IATI 보고기준 활용(Implementation of IATI data reporting standards)과 주요공여기관 평가정책의 질(Quality of main agency evaluation policy))는 2008년 결과값이 없다. IATI 멤버여부를 묻는 지표 외에는 전 지표에서 개선을 보였으며, 프로젝트명과 개요 기록(Recording of project title and descriptions), 원조분배채널 보고 (Reporting of aid delivery channel), 프로젝트 단위 약정데이터 완결도(Completeness of project-level commitment data), 우수 M&E틀을 가진 수원국 지원(Aid to partners with good M&E framework) 4개의 지표는 평균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이제 IATI 옵저버 국가가 되었고 앞으로 국제적으로 원조관련 자료와 정보 공개의 투명성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ATI의 보고체계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DAC와 IATI, AidData 등 원조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원조정보 관련 기관들의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보 입력을 적기에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7] 투명성과 학습(Transparency and Learning) 8개 지표 평가결과



출처 : 저자 작성, QuODA 2008, 2009 평가 데이터 재구성

4. CDI, QuODA와 우리원조의 개선사항

이제까지 CDI, QuODA의 의미와 지표별 산정방법, 한계와 의의, 그리고 CDI와 QuODA의 관점에서 실시된 우리나라 ODA의 평가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ODA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 신흥공여국으로서의 입장 표명 및 이해도 제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CDI와 QuODA는 오랜 원조 전통을 갖고 있는 서구공여국의 입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되어 신흥공여국이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제기하여 우리와 맞지 않는 기준을 지켜, 역으로 우리 원조 수행의 질적 저하가 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협력대상국 선택시 국제기준 고려 강화

CDI와 QuODA 모두 가난하며 거버넌스가 우수한 국가에 대한 지원에 가산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QuODA는 M&E 시스템을 잘 갖춘 국가, 건전한 국가개발전략을 갖춘 국가에 대한 원조를 권장한다. 파리선언과 동일하게 수원국의 PFM과 조달 시스템 사용 또한 권장대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대상국 선정시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를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아래 [표 7]과 같이 상기 6개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를 리스트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리스트의 국가를 점검 후 협력대상국을 조정하거나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겠다.

[표 7] QuODA지표 대비 우수 수원국 리스트

순위	CGDP	WGI	개발계획(OS) 수원국	개발계획 평가결과
1	Congo, Dem. Rep	Anguilla	Rwanda	A
2	Burundi	Chile	Tanzania	A
3	Liberia	St. Lucia	Albania	B
4	Somalia	St. Kitts And Nevis	Benin	B
5	Malawi	St. Vincent & Grenadines	Botswana	B
6	Sierra Leone	Uruguay	Cambodia	B
7	Eritrea	Antigua And Barbuda	Egypt	B
8	Niger	Mauritius	Ethiopia	B
9	Ethiopia	Dominica	Ghana	B
10	Madagascar	Botswana	Honduras	B
11	Afghanistan	Latvia	Kenya	B
12	Gambia	Costa Rica	Laos	B
13	Central Africa Rep.	Cape Verde	Malawi	B
14	Guinea	Grenada	Mozambique	B
15	Nepal	Samoa	Nigeria	B
16	Zimbabwe	Namibia	Pakistan	B
17	Togo	Palau	South Africa	B
18	Mozambique	Vanuatu	Sudan	B
19	Uganda	South Africa	Togo	B
20	Tanzania	Tuvalu	Uganda	B
21	Guinea-Bissau	Malaysia	Viet Nam	B
22	Rwanda	Panama	Zambia	B
23	Timor-Leste	Nauru	Afghanistan	C
24	Bangladesh	Micronesia	Armenia	C
25	Myanmar	Brazil	Bangladesh	C
26	The Gambia	Ghana	Bolivia	C
27	Burkina Faso	Seychelles	Burkina Faso	C
28	Tajikistan	Montenegro	Cameroon	C
29	Haiti	Bhutan	Gambia	C
30	Lesotho	Kiribati	Lesotho	C
31	Mali	Jordan	Mali	C
32	Chad	Turkey	Mauritania	C
33	Benin	Macedonia	Moldova	C
34	Kenya	Tunisia	Mongolia	C
35	Cambodia	Jamaica	Niger	C
36	Comoros	Belize	Papua New Guinea	C
37	Kyrgyz Republic	El Salvador	Philippines	C
38	Laos	Suriname	Samoa	C
39	Mauritania	Marshall Islands	Senegal	C
40	Pakistan	Lesotho	Sierra Leone	C
41	Zambia	Georgia	Solomon Isiands	C
42	Senegal	Albania	Tajikistan	C
43	Cote d'Ivoire	Mexico	Timor-Leste	C
44	India	Serbia	Vanuatu	C
45	Yemen	Mozambique		
46	Viet Nam	India		
47	Nicaragua	Armenia		
48	Nigeria	Thailand		
49	Cameroon	Benin		
50	Ghana	Tonga		

출처 : 저자작성, QuODA데이터(2012)와 2011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 참조.

1) CGDP열은 1인당구매력GDP 기준 최빈곤 50개국을 순서대로 나열함 (CDI 원조지표 및 QuODA지표 1번과 관련).

2) 국가거버넌스지수(WGI)열은 거버넌스지수 최상위국가를 나열하여 그 중 OECD/DAC의 수원국리스트에 포함되는 국가만을 상위 50위까지 나열함 (CDI 원조지표 및 QuODA지표 2번과 관련).

3) 개발계획(OS)수원국과 평가결과열은 양질의 개발계획(QuODA지표 12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C등급 이상)받은 수원국과 등급을 나열함 (같은 등급내에서는 국명 알파벳순서임).

순위	PFM 수원국	PFM 평가결과	조달평가 수원국	조달시스템 평가결과	MA 수원국	MA 결과
1	Armenia	4.5	Cameroon	B	Cameroon	B
2	Burkina Faso	4.5	Kosovo	B	Egypt	B
3	Cape Verde	4	Niger	B	Ethiopia	B
4	Kosovo	4	Rwanda	B	Honduras	B
5	Moldova	4	Senegal	B	Kenya	B
6	Mongolia	4	Sierra Leone	B	Moldova	B
7	Mozambique	4	Tanzania	B	Nepal	B
8	Rwanda	4	Uganda	B	Pakistan	B
9	Viet Nam	4	Afghanistan	C	South Africa	B
10	Vanuatu	4	Albania	C	Tanzania	B
11	Afghanistan	3.5	Cambodia	C	Viet Nam	B
12	Benin	3.5	Ghana	C	Ukraine	B
13	Bolivia	3.5	Indonesia	C	Afghanistan	C
14	Bosnia-Herzegovina	3.5	Laos	C	Albania	C
15	Cambodia	3.5	Malawi	C	Bangladesh	C
16	Ethiopia	3.5	Moldova	C	Bolivia	C
17	Gambia	3.5	Mongolia	C	Bosnia-Herzegovina	C
18	Ghana	3.5	Namibia	C	Botswana	C
19	Honduras	3.5	Philippines	C	Burkina Faso	C
20	Kenya	3.5	Viet Nam	C	Cambodia	C
21	Kyrgyz Republic	3.5	Zambia	C	Cape Verde	C
22	Laos	3.5			Central African Rep.	C
23	Lesotho	3.5			Congo, Dem. Rep	C
24	Mali	3.5			Ghana	C
25	Niger	3.5			Kyrgyz Republic	C
26	Pakistan	3.5			Laos	C
27	Samoa	3.5			Lesotho	C
28	Senegal	3.5			Liberia	C
29	Sierra Leone	3.5			Malawi	C
30	St. Vincent & Grenadines	3.5			Mali	C
31	Tanzania	3.5			Mauritania	C
32	Uganda	3.5			Mongolia	C
33	Zambia	3.5			Mozambique	C
34	Tajikistan	3.5			Niger	C
35	Tonga	3.5			Nigeria	C
36	Bangladesh	3			Philippines	C
37	Burundi	3			Peru	C
38	Cameroon	3			Rwanda	C
39	Central African Rep.	3			Samoa	C
40	Haiti	3			Senegal	C
41	Malawi	3			Sierra Leone	C
42	Mauritania	3			Solomon Islands	C
43	Nigeria	3			Sudan	C
44	Papua New Guinea	3			Tajikistan	C
45	Sao Tome & Principe	3			Togo	C
46	Timor-Leste	3			Uganda	C
47	Togo	3			Zambia	C
48					Vanuatu	C
49						
50						

출처 : 저자작성, QuODA데이터(2012)와 2011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 참조.

4) PFM수원국과 평가결과열은 PFM사용이 권고(QuODA지표 13번)되는 수원국(3점 이상)의 이름과 국별 점수를 나열함 (같은 등급내에서는 국명 알파벳순서임).

5) 조달평가수원국과 평가결과열은 조달시스템사용이 권고(QuODA지표 13번)되는 수원국(C등급 이상)의 이름과 국별 점수를 나열함 (같은 등급내에서는 국명 알파벳순서임).

6) MA수원국과 결과는 우수한 M&E시스템(QuODA지표 31)을 갖고있다고 평가받은 수원국(C등급 이상)의 이름과 국별 등급을 나열함 (같은 등급내에서는 국명 알파벳순서임).

■ 비구속화원조 노력 지속

CDI, QuODA 모두 공통적으로 비구속화 원조비율의 증대를 측정 지표로 삼고 있다. 비구속화원조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우리정부는 비구속화 원조의 비율을 무상 100%, 유상 50% 2015년까지 끌어올릴 비구속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파리선언의 비구속화 목표치가 89%였으며, 2011년 DAC회원국들의 비구속화원조 비율은 84%(OECD, 2011)이다. 즉, 2015년까지 우리정부의 비구속화 원조 계획에 따라 75%의 비구속화를 달성한다 해도 여전히 대부분의 DAC회원국에 비해 비구속화비율이 저조한 것이다. 따라서, 특히 유상원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비구속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상원조 비율 증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CDI의 원조지표는 결국 질을 고려한 원조 금액을 평가한다. 즉, CDI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 원조 금액의 증대가 필요하다. CDI의 지표산정방식에 따르면 유상원조에 따른 부채탕감과 상환액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모두 원조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다면 CI지표의 개선은 어려우며 이는 일본의 점수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일본, 포르투갈과 더불어 DAC회원국 중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은 국가이다. 2010년 기준에 따르면 DAC회원국의 무상원조비율은 평균 92%이나 우리나라는 일본(56%), 포르투갈(68%)에 이어 세 번째로 무상비율(70%)이 낮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무상원조의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다.

■ 원조분절화에 대한 대책 수립

파리선언과 QuODA는 모두 원조분절화의 심화를 통한 수원국과 공여국의 행정부담 증가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여국간 원조조화를 통해 공동연구,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PIU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 공여기관간 분절화가 심화된다면 수원국 부담경감 관련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2009년 평가에서 가장 분절화가 심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15개 원조관련 기관을 보고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백만불 이상의 원조실적을 가진 기관은 17개였다. 2009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부족으로 평가가 제외되었지만, 만약 평가를 받았다면 분절화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한편, 원조를 수행하려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ODA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상대적으로 결여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관들의 원조 참여 증가로 인해서 일원화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원조 행정부담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유발하여 원조의 질을 저하하는 분절화의 심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QuODA 기관별 평가와 KOICA의 고려사항

5.1. QuODA 기관별 평가 결과

QuODA는 둘 이상의 원조기관을 보유한 공여국을 고려하여 원조를 수행하는 실행기관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즉, 국가전체에 대한 측정 지표는 원조 정책과 상관없는 원조 집행 기관들에 대한 심사에 맞지 않으므로, 31개 지표 중 원조 집행 기관들이 달성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개의 지표[20]에 대해 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8]은 QuODA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5개 원조기관 중 원조 실행 기관인 KOICA와 수출입은행의 원조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QuODA는 각 공여국별 원조기관을 DAC CRS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원조기관으로 등록되어 분류 코드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로 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KOICA, 기타의 5개 코드로 분류되어 DAC에 통계를 보고하는 바, 5개의 원조기관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중 정책담당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를 제외한 3개 코드에 대해서 실행기관평가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기타는 분류일 뿐 실제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실제 유효한 기관별 평가 결과는 KOICA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결과라 하겠다. 아래 표는 KOICA의 원조가 2008년에 비해 행정부담 경감(Reducing Burden)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질적 개선을 이룬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이해관계와 국가 전략에 따라 소규모로 다국에 주어지며, 유상처럼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실질적 한계가 있는 무상원조 수행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표 8] KOICA와 수출입은행 기관별 QuODA평가 결과 비교

연도	기관	효율성 증대 (Maximizing Efficiency)	제도 배양 (Fostering institutions)	행정부담 경감 (Reducing Burden)	투명성과 학습 (Transparency and Learning)
2009	수은	0.142509973	0.479465065	0.996293155	0.555393076
	KOICA	−0.52190154	0.242519031	−0.13211329	0.340229039
2008	수은	0.115109	0.889061	0.611911	0.57748
	KOICA	−0.9075776	0.290072	−0.025210	−0.30971

출처 : 저자 작성, www.cgdev.org/section/topics/aid_effectiveness/quoda의 데이터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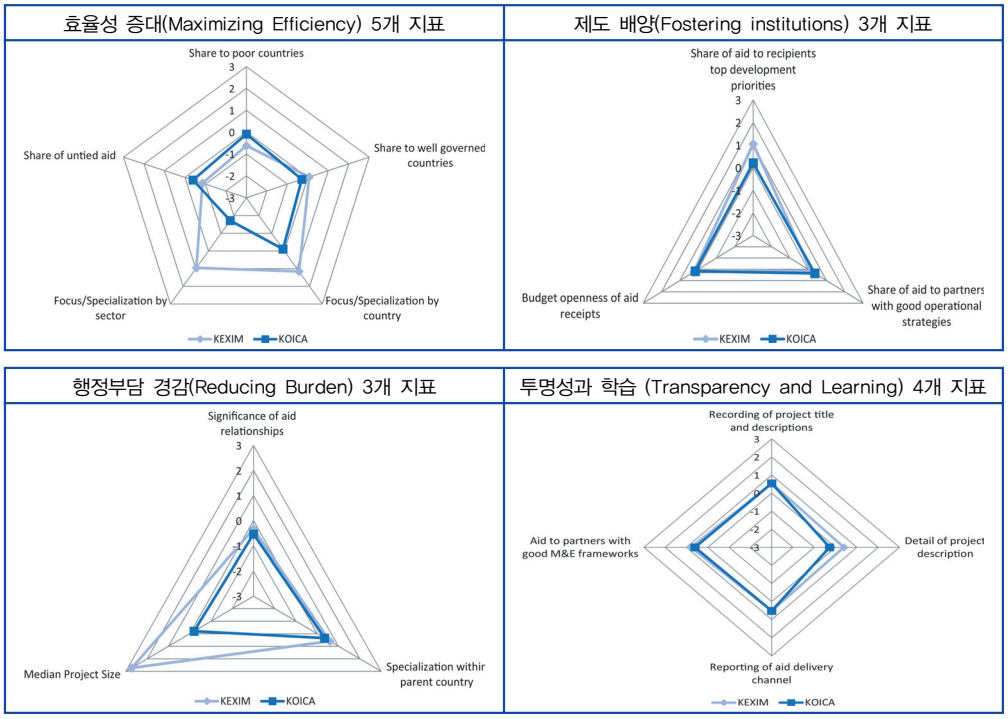
20) 31개 지표 중 공여기관별 평가에 사용된 15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효율성증대 측면에서 5개 (빈곤국 지원 비중, 안정된 거버넌스 보유국가 지원비중, 높은 국가 집중도, 높은 분야 집중도, 비구속성원조비율), 제도배양 측면에서 3개 수원국 우선 개발과제 지원비중, 우수실행전략을 보유한 수원국 지원 비중, 수원국 시스템 활용), 행정부담경감 측면에서 3개 (원조관계의 중요성, 공여국내 원조기관 분절화, 프로젝트 규모 중간값), 투명성과 학습 측면에서 4개 (프로젝트명과 개요 기록, 프로젝트설명자료, 원조분배채널보고, 우수M&E틀을 가진 수원국 지원)이다.

아래의 그림은 2009년 QuODA 원조 기관별 평가의 세부항목별 평가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KOICA는 15개 지표 중 3개 지표에서 나은 결과를 보였고 2개 지표에서는 수출입은행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효율성 증대(Maximizing Efficiency)에서는 특히, 분야별, 국별 집중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KOICA가 외교적 필요에 따라 소규모로 다국가에서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다분야에서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청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 외교적 고려를 통해 선택되므로 KOICA는 많은 국가에서 다분야에 소규모사업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수원국과 스스로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갖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KOICA는 국별전략에 따라 국가별, 분야별 집중도를 높이고 사업의 숫자를 줄이는 별도의 개선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Fostering Institution)에서는 두 개 지표에서 점수상으로는 더 나은 평가를 받았으나, “수원국개발전략에 따른 원조”지표에서 차이가 커서 전반적인 평균치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었다. 행정부담 경감(Reducing Burden)에서는 특히, 프로젝트 중간값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KOICA가 소규모로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QuODA는 프로젝트 중앙값 산정을 위해 25만불 이하의 사업은 제외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유상프로젝트에 비해 단위사업 규모가 매우 과소하여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결과가 나타났다. OECD 등은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원조수행관련 효과성 증진을 위해 행정부담과 이전비용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연구결과로 지적된 바와 같이 5만불 사업이나 5,000만불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소요가 비슷하므로 결국 비용대비효과를 고려 시 사업규모를 늘리는 것이 원조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 따라서, KOICA도 단위사업규모를 늘리고 수를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2010년도에 OECD DAC의 통계작업반은 우리나라가 CRS시스템에 제공하고 있는 통계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유상원조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을 수행하는 KOICA로서는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훨씬 많으며 따라서 더 많은 부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평가결과가 나온 것은 KOICA가 DAC의 통계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이다.

KOICA는 DAC의 정식회원국이 아닌 2008년에도 우리정부의 방침에 따라 파리선언 모니터링에 참여했으며, 이후로도 원조의 질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증가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에 급급하여 즉각적인 정책과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KOICA는 우리나라 유일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서 앞으로 연구조사와 통계, 기획 부분 제도개선에 보다 힘써 우리나라 원조의 질을 높이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2009년도 Agency Level 평가 비교



출처 : 저자 작성, QuODA 2009년 평가결과 재구성

5.2. QuODA 평가결과를 고려한 KOICA의 개선사항

이제 CDI와 QuODA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KOICA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사업건수 축소 및 단위사업 예산 증대

QuODA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규모 프로젝트와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에 투입되는 행정부담은 그리 큰 차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소규모의 여러 프로젝트로 사용할 때 대규모의 한 프로젝트로 사용할 때에 비해 훨씬 더 많

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QuODA와 CDI는 모두 사업건수를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려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행정부담을 권고할 것을 주문한다. 실제 QuODA의 우리나라 기관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단위사업 규모가 큰 수출입은행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그 규모가 매우 작은 KOICA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KOICA는 게다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1인 1사업으로 보고되는 전문가파견, 봉사단 파견이나 단기연수 등 기술협력사업을 통합하여 프로젝트화하고, 과감하게 사업건수를 축소하며, 단위사업예산을 증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국제적 원조기준에 맞춘 사업수행체계 전환

DAC의 원조형태 분류와 KOICA의 원조형태 분류는 같지 않다. 물론 각 기관별로 정책과 제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KOICA는 동일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서 사업추진방식을 복잡하게 하고, 통계도 지나치게 복잡하게 정리되어 행정부담이 과도한 상태에 있다. UN, PMI 등의 기관들은 모두 '하나의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한정된 기간 동안 자원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행동'을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개발조사와 같은 사업은 모두 프로젝트이며 따라서 프로젝트사업추진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PMC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지나치게 세밀한 구분과 각기 다른 사업추진 절차 사용으로 인해 제도와 규정이 복잡해지고, 통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지금의 사업분류형태와 추진방식을 과감히 개선하여, ODA관련 이슈와 동향을 연구하고 조사하여 진정한 ODA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수원국과 분야의 선택과 집중 강화

파리선언 이후 대부분의 원조효과성 관련 담론은 지원 대상 국가와 지역, 분야에 집중하여 공여국간 중복을 피하고 분야와 국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도록 주문하고 있다. CDI와 QuODA역시 분야별, 국별 집중도를 평가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 KOICA는 지나치게 많은 국가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각 국별로 상이한 개발환경에 대한 이해와 깊이있는 연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인력과 과중해진 업무를 감안할 때 이러한 분야와 국가의 집중은 더욱 필요하다. 수원국별 개발상황과 KOICA의 전문성,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국가와 분야를 한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지원 국가 및 분야를 공동 결정하는 총리실, 외교부, 기재부 등의 정책기관의 의사결정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통계분석 및 관리 강화

CDI, QuODA, 파리선언 모니터링 모두 DAC의 통계자료나 AidDATA, IATI 등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형성되는 지표들이다. 즉, 우리가 현재 국제적인 원조관련 통계기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적절히 대응을 한다면 지표의 개선과 함께 각 지표별로 시의 적절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 KOICA는 단 한명의 인력이 전체 실적 데이터를 관리하며, DAC의 통계회의에 대응하고, 통계가이드라인을 관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주요한 통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은 불가능하다 하겠다. 통계는 모든 조사와 연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KOICA는 통계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 KOICA의 정책영향력에 대한 한계인식

CDI의 지표 7개 중 KOICA와 관련있는 지표는 단 1개 원조(Aid)지표이다.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지표는 원조의 양을 측정하므로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원조증액방향에 대해 KOICA가 직접적인 책임성을 가질 수는 없다. 즉, QuODA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행을 주로 하는 공여기관은 원조효과성관련 정책이나 국별전략에 대한 영향력이 미비한 바, 국별 평가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즉, KOICA는 전문공여기관으로서 사업수행 및 기관정책과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진하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6. 기관별 성과평가와 국제적 평가의 활용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별 성과평가가 활발하다. KOICA 또한 자체적인 성과평가뿐 아니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정부부처로부터 기관 성과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ODA는 그 최종 수혜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라는 점, 해외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수행된다는 점, 국제적인 개발협력 관련 기준을 지켜야하는 바, 국내정책 만큼 국제적 개발협력 아젠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여타 국내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와는 다른 지표와 평가방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원조에 특화된 성과지표를 통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평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상황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특화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개발과 평가수행이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CDI나 QuODA와 같은 국제적인 원조관련 평가 지표를 준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지표들 자체도 한계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여국이 활용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점이 많다. 게다가, CDI의 경우 원조에 특화된 평가가 아닌 개발협력에 대한 정부정책의 공헌도를 심사하며 원조지표 자체도 질적 평가가 아닌 “질을 고려한 양”(Quality-Adjusted Quantity)에 대한 평가이므로 이 자체를 KOICA와 같은 원조실행기관의 기관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uODA는 ODA에 특화되어있으며 자체적으로 15개 지표를 활용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하므로 성과지표로 준용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그러나, 이 지표 또한 서구공여국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평가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원조실행기관별 성과를 측정하기위해 추려진 15개 지표 중 국가 집중도나 분야별 집중도 지표의 경우, 우리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분야, 다국가에 지원을 해야 하는 KOICA의 성과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 공여국내 원조기관 분절화 지표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부처와 기관들이 각각 ODA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KOICA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KOICA의 기관성과 지표로는 맞지 않다. 우리나라의 원조금액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제규모가 비슷한 타공여국에 비해서도 과소하다. 우리나라 총원조에서 약 31% 정도(2011년 잠정기준)를 차지하는 KOICA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전략적 고려에 따라 124개 수원국(2011년 잠정기준)에 원조를 배분했다. 즉, 원조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수원국과 분야별 집중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호주의 경우도 개발원조의 질 평가에 대해서 국제적인 시각과 국내적인 시각으로 분리하여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즉,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지표 활용도 중요하나, 국내적인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 우리원조의 상황과 수준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결론

지금까지 CDI, QuODA의 지표들의 정의와 계산방식, 의미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원조에 대한 CDI와 QuODA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물론 CDI와 QuODA는 무오류의 완벽한 지표는 아니며, 그 지표가 나타내는 순위와 결과값이 실제 원조효과성과 적확한 상관관계를 갖느냐는 질문은 유효하며 본문에서 제시한 지표의 한계를 고려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논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제적인 순위가 발표되면 공여국 정부는 순위를 개선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며, 이로서 순위상승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진다. DAC의 Special Review팀도 2008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조기관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DAC가입 등으로 인해 지켜야할 국제적 원조 규범의 수는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 원조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도 점차 높아가고 있다. 즉, 인력에 비해 수행해야할 업무와 업무의 수준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KOICA는 증가하는 예산과 대내외적 효과성 제고 요구에 맞춰 사업수행체제를 개선하고 연구와 정책 개발에 힘써 우리나라의 원조의 질 개선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Appendix 1. 원조형태(Aid Modality)와 새로운 분류법들(Aid Instruments)

OECD/DAC는 원조형태(Aid Modality)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사업형태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지칭하는 분류법들이 파리선언과 같은 일련의 원조관련 논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고 있다. SWAp, PBA, CPA 등의 새로운 분류방식은 원조사업형태가 아니며,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특히, PBA나 CPA는 DAC 통계 보고시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새로운 Aid Instrument에 대한 이해는 파리선언 이행 및 향후 원조 동향 파악에 필수적이므로, 몇 가지 주요 원조 형태와 분류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원조형태 (Aid Modality) 구분

○ **재정지원 (Budget Support)**

√ 일반재정지원 (General Budget Support; GBS) : 수원국 정부가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족한 정부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가 개설하여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약정한 금액을 송금하는 형태의 원조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원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아, 수원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다. 재정지원을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형태로 예산사용내역과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

√ 분야별재정지원 (Sector Budget Support; SBS) : 일반재정지원시 발생가능한 위험을 줄이고 지원된 예산의 사용 추적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해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원조방식을 의미한다. 다른 사항은 일반재정지원과 동일하다.

○ **공동기금 (Pooled or Basket Funds)**

√ 공여국들이 특정분야 내 하부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금이다. 많은 경우, 수원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이 아닌 기금 운영자로 합의된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는 기금형식의 지원을 의미한다.

√ 다수공여국신탁기금 (Multi-Donor Trust Fund) : 공동기금 중의 하나의 형태로 주로 세계은행, UNDP, OCHA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운영되며, 수원국 기존의 SWAp 아래에서 운영된다.

○ **통합된 프로젝트 (Integrated Project)** : 수원국정부의 개발계획과 정책 및 시스템과 연계되어 수행되어 PBA로 포함될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의 원조방식을 의미한다.

○ **독립된 프로젝트 (Stand-alone Project)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공여국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형태의 원조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KOICA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사업이 속한다.

※ OECD/DAC 통계지침에 따르면, 원조는 크게 ① 재정지원(Budget Support), ② 비지정기여금과 공동기금, 공동프로그램 (Core Contributions and Pooled Programmes and Funds), ③ 프로젝트(Project-Type Interventions), ④ 전문가와 기술지원(Experts and Other Technical Assistance), ⑤ 공여국내 장학금과 학생지원(Scholarships and Student Costs in Donor Countries), ⑥ 부채탕감(Debt Relief), ⑦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not Included Elsewhere), ⑧ 기타공여국내지출(Other In-Donor Expenditures)로 구분된다.

원조분류법

○ **분야적접근법 (Sector Wide Approach; SWAp)**

√ SWAp은 PBA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접근법으로서, PBA의 원칙이 SWAp에 그대로 적용된다.

√ SWAp 역시 원조형태(Modality)가 아니다. 다만, 프로젝트나 기술협력 등과 같은 원조형태들이 수원국이 수립한 분야계획에 따라 PBA의 원칙들을 충족하여 수행될 경우, SWAp으로 간주된다.

√ DFID에 따르면 SWAp은 아래와 같은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수행되며,
- 통합적인 분야 정책과 전략
- 연간 분야별 예산집행 프로그램과 중기 분야별 예산집행 계획
- 수원국 정부가 주도하는 공여국별 업무 조율
- 합의된 틀 안에서 주요 공여국이 지원 수행

√ 아래의 2개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여 수행되는 원조 형태를 의미한다.
- 대다수의 공여국이 수원국 정부의 금융과 책임성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조를 수행할 의지 보유
- 공여국들이 합의한 공동의 실행과 관리 접근법

※ SWAp과 PBA의 차이는 SWAp은 교육, 보건과 같은 큰 분야에 대한 단일한 체계를 갖는 지원을 의미하나 PBA는 보다 소규모의 세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도 통합한다는 점이다. 보건과 같은 거대 분야에 대한 단일한 실행과 관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 SWAp은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 **프로그램에기초한 접근법 (Programme Based Approach; PBA)**

√ OECD/DAC에 따르면, PBA는 국가개발전략, 분야별 프로그램, 주제별 프로그램, 또는 특정기관의 프로그램과 같은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조율된 지원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협력활동을 의미한다.

√ PBA는 원조형태(Modality)가 아니다. 다만, 프로젝트나 재정지원, 기술협력과 같은 원조형태들이 아래의 원칙을 충족하여 지원될 경우, PBA로 간주된다.

- 수원국 정부나 기관의 리더십
- 단일한 예산체계를 갖는 통합적 프로그램
- 보고, 예산, 회계와 조달관리를 위한 공여국간 조화와 조율된 절차와 과정보유
- 프로그램 기획과 수행, 예산 관리,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수원국 시스템 사용 노력 강화

○ **프로그램화가능원조**
(Country Programmable Aid; CPA 또는 Programmable Aid; PA)

√ OECD/DAC에 따르면, CPA 또는 PA는 공여국들의 원조 중 말 그대로 프로그램화가 가능한 원조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프로젝트, 부채탕감, 기술협력과 같은 원조형태 중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전략에 따라 협의를 통해 보다 조율된 방향으로 수행방식이 개선될 수 있는 원조들이다. 따라서, 모든 PBA와 BS는 CPA에 포함된다. 이렇게 프로그램화가 가능한 원조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는 이유는 향후 공여국들이 이러한 원조를 수행시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정책에 일치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이러한 원조를 PBA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단계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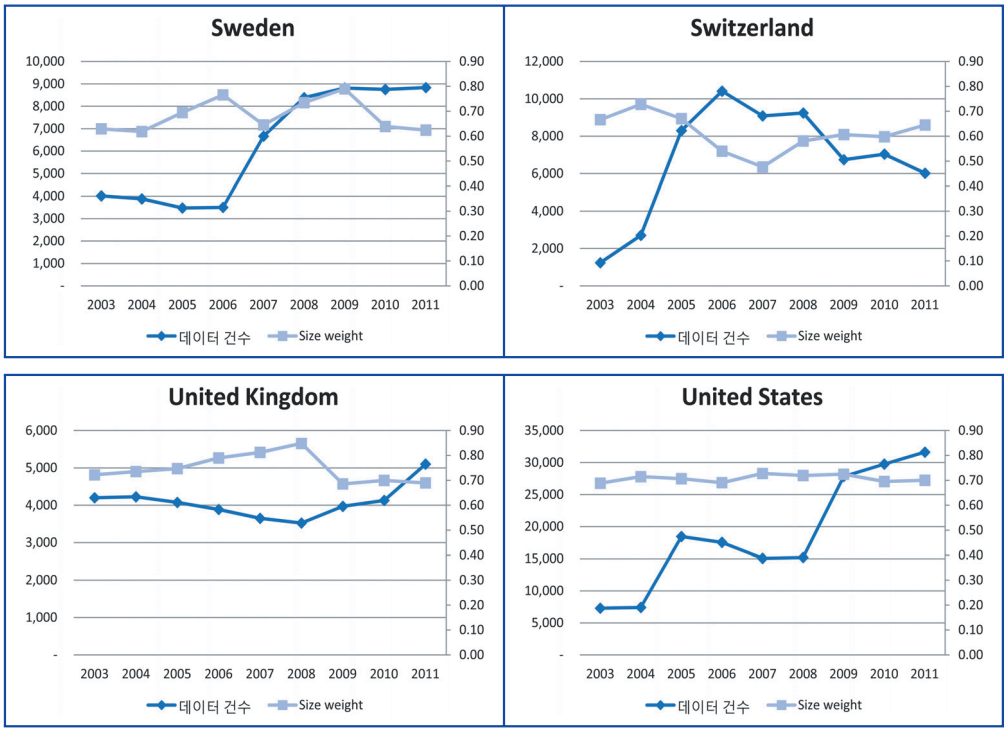
√ CPA=전체원조-(부채탕감+인도적지원+식량지원+행정비용+공여국내학생지원비+개발인식증진비+NGO지원)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출처 : 저자작성 (DFID보고서 및 DAC 통계기준을 재구성 및 보완)

Appendix 2. 국가별 CRS 데이터 수와 size weight 계수 그래프 (2003–2011년)




Finland
2,500
2,000
1,500
1,000
500
-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Ireland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Italy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Japan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Netherlands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Norway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Portugal
1,200
1,000
800
600
400
200
-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Spain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Sweden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Switzerland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United Kingdom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United States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데이터 건수
Size weight

참고 문헌

김대욱, 조이슬 (2012) 이제는 원조의 질이다: 개발공헌지수(2011) 상세분석 ①원조. ODA Watch. http://www.odawatch.net/16968.

박수영, 조아영 (2009)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평가 연구. KOICA.

조한슬 (2011) 개발성과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KOICA.

한승헌 (2010) "새로운 ODA질적 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브루킹스 연구소 및 국제개발센터의 「ODA 질적 평가 보고서」 분석."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6호. KOICA.

Balassa, B. (1965)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33:99-123.

Birdsall, N. and Kharas, H. (2010)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Brookings Institute and th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ww.cgdev.org/section/topics/aid_effectiveness/quoda

Birdsall, N, Kharas, H and Perakis, P (2011) *Measuring the quality of ODA second edition*, Brookings Institute and th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ww.cgdev.org/section/topics/aid_effectiveness/quoda

Birdsall, N, Kharas, H and Perakis, P (2012) *The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2009: Is Aid Quality Improving?* Brookings Institute and th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ww.cgdev.org/section/topics/aid_effectiveness/quoda

Collin, M., A. Zubairi, D. Nielson, and O.Barder (2009) "The Costs and Benefits of Aid Transparency." Aidinfo Report. Wells, UK.

DFID (2008) *Guidance on Aid Instrument: A DFID Practice Paper.* http://www.dfid.gov.uk/Documents/publications/aid-instruments-guidance.pdf

Jepma, CJ (1991) *The tying of aid*. Development Centre of the OECD.

Kaufmann, D, Kraay, A & Mastruzzi, M (2009) "Governance Matters VIII: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1996-2008".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978.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24591

Kaufmann, D, Kraay, A & Mastruzzi, M (2010)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Methodology and Analytical Issu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430.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682130&rec=1&srcabs=1424591

Knack, S, Rogers, FH, & Eubank, N (2010) "Aid quality and door ranking",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290,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601131

OECD (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http://www.oecd.org/dataoecd/25/30/48742718.pdf

Roodman, D. (2011a) The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2011 Edition.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ww.cdgev.org

Roodman, D. (2011b) An Index of Donor Performance. Working Paper Number 67.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ww.cdgev.org

연구자료 ODA연구 2012-06-073

KOICA 개발정책포커스 11호

발 행 2012년 4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 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동화인쇄사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ISSN 2093-2111